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주의요구

제 목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 따라 창녕군에서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5급 이하 공무원 정기근무 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제3항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결원이 발생한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제3항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창녕군에서는 2016년 12월, 2017년 6월 정기 근평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하여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함으로써, 행정7급 ☆☆☆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상향 변경(12위 → 9위) 되고, 보건6급의 경우에는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의 1위(○○○○, 총점 94.50)와 2위(◇◇◇, 규칙준수 시 총점 95.25)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현재 창녕군인사위원회에서는 상시학습 미이수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대로 승진 의결함

처 분 요 구

① 창녕군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 처리 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과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행정주사 ○○○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과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사무관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경력직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각 임용사유별로 응시요건(임용자격)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 결원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 정원은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자격증 및 응시자격 제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제2호¹⁾ 및 제9호²⁾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1) 제27조제2항제2호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제27조제2항제9호 :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경력기준 및 특수전문 분야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 계급별 자격증 기준(별표5, 별표5의2), 특수전문 분야 등(별표 2, 3, 4)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의 단서조항³⁾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제3호⁴⁾ 및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임용자격)을 각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경력직 일반임기제 응시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

계급	임 용 자 격
6급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 분야 임기제 응시요건(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용)

계급	임 용 자 격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정원의 결원이 없음에도 일반임기제(농업7급) 공무원 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면 정원 관리기관별로 그 근무기간동안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녕군에서는 따오기 연구 및 사육 분야 일반임기제(농업7급)공무원 신규임용 계획(2016.4.) 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창녕군

3)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27조제2항제3호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제2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기관에 결원이 없음(정원 10명, 현원 10명)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였다.

※ 농업7급 ☆☆☆ 의원면직(2017.10.17.) 시까지 정원의 결원이 없음에도 임기제 채용

나. 법령 및 지침 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

경력경쟁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지방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임용사유별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과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녕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경력직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시 위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임용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을 법 제27조제2항제3호와 제27조제2항제9호의 자격요건을 동시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임용 공고하였다.

< 일반임기제 농업7급(따오기 연구 사육분야) 채용 시 자격요건 비교 >

구분	자 격 요 건
창녕군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학과) : 조류학, 동물학, 야생생물관리학, 생물학, 생명과학, 생태학, 수의학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조류연구 또는 조류사육 관련 근무경력

※ 2015년 ~ 2018년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7명 중 6명에 대해 자격요건 과도하게 적용

다.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하여 자격증 소지자 기준 부적격자 채용

「지방공무원법」 제27제2항제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려는 경우,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별표5, 별표5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령상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기준을 직렬별로 규정하고 있다.

창녕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업7급/일반기계, 사진촬영 분야)공무원 임용 계획(2016.4.11.) 시 공업7급(일반기계, 사진촬영)을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규칙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인 “영사산업기사” 등으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면서 동시에 관련학과(학위)도 제한하여 아래와 같이 응시요건을 결정 공고하였다.

○ 공업7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기준표(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2)

직렬	직류	자 격 요 건
공업 7급	일반 기계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기계설계...(이하생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배관, 영사 ...(이하생략)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

○ 창녕군 일반임기제 공업7급(일반기계, 사진촬영) 응시요건

직급	자 격 요 건
지방 공업 주사보	<p>● 사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학위(학과) : 사진학, 사진영상학, 사진예술학, 사진영상디자인학</p> <p>※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계통 학과 증명 서류 제출</p> <p>▶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사진촬영 관련 근무경력</p>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자격증 소지자 기준을 위반하여 경력직 일반임기제를 임용하였다.

처 분 요 구

- ① 창녕군수는 경력직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업무 처리 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양 통합지침」,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과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경력직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창녕군 ★★과 지방행정주사 ▽▽▽,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사무관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가축방역 교육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는 2012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거나 예방접종·방역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89대에 대해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그 소유자 및 운전자가 가축방역 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르면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거나 예방접종·방역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르면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500만 원’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창녕군 ☆☆☆☆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창녕군 ☆☆☆☆과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37명이 차량 등록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년 ~ 6년 이상 경과하도록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37명)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 지방농업주사 ○○○, ☆☆☆☆과 지방농촌지도사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확인서 발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통해 차고지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5.0미터, 최대6.0미터의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녕군 ○○○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하면, 신청 토지가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고,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을 확인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처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창녕군 ○○○과는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하면서, ①고암면 ◇◇리 ◆◆번지의 토지대장상 면적은 48㎡로 차고지내 차량의 회전·통행을 위한 주행로 등의 면적을 고려하면 전체를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전체 면적인 48㎡에 대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②고암면 ●●리 △△번지에는 차고지가 아닌 철근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③대지면 ▲▲리 ▽▽번지에는 차고지 입구가 닫혀 있어 차고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p>고암면 ●●리 △△번지 ※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p>	<p>대지면 ▲▲리 ▽▽번지</p>

조치할 사항

- ① 창녕군수는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행정주사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총 8종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표1>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

구분	계	2015. 7.이후	2016년	2017년	비고
제작회수	14회	2회	5회	7회	
제작업체	□□ 3 ㄴㄴ 11	□□ 1 ㄴㄴ 1	□□ 1 ㄴㄴ 4	□□ 1 ㄴㄴ 6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5. 8. 5.)」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금지를 위해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작일지에는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창녕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창녕군, 연락처, 제조업체의 고유 번호 등을 표시하며, 문장의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창녕군은 제작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입회·확인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봉투를 검수하기 전에는 제작일지를 확인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제작·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창녕군 □□□□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14회(2015년 2회, 2016년 5회, 2017년 7회)에 걸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입회·확인)한 사실이 없고, 봉투제작 후 검수를 완료하기 전에 작업일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창녕군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 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시고, 제작업체에서 작성한 작업일지 등을 확인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지방환경서기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은 제14회 1,2학년 대학○○대회를 유치하여 주관기관인 □□□□과 ■■
■■에 각각 180백만 원과 64백만 원의 대회 개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대회가
종료된 후 2개 보조단체로부터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정산완료 처리하였다.

□ 제14회 1,2학년 대학○○대회 개요

- 기 간 : 2017. 12. 24.(일) ~ 2018. 1. 5.(금) / 13일간
- 장 소 : 창녕스포츠파크(6개 구장)
- 참가인원 : 26개팀 2,000여명(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 예산지원 : 243,800천원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등) 및 제32조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등)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
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7. 7. 26. 시행)」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2. 민간이전 부분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7. 9. 25.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및 수행상황 점검, 회계관리,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사업비 정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 임·직원에게 부당한 대회진행 수당 지급

「지방재정법」 제32조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등)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창녕군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공문의 교부조건으로 이러한 내용을 관련 보조사업자인 □□□□에 안내하였다.

그러나 □□□□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사업비 산출기초에 연맹 임직원에게 지급된다는 내용 없이 ‘대회진행 수당’ 명목으로 10,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실제로 대회기간 중인 2017. 12. 26. 다음과 같이 연맹의 임·직원 17명에게 대회 임원수당 명목으로 1인당 500천 원부터 1,600천 원, 합계 11,000천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임·직원 대회진행 수당 지급내역 >

(단위 : 원)

연번	직 책	금 액	연번	직 책	금 액
1	부회장	500,000	10	이사	500,000
2	전무이사	1,200,000	11	이사	500,000
3	총무이사	500,000	12	이사	500,000
4	기술이사	500,000	13	이사	500,000
5	경기이사	1,000,000	14	상별이사	500,000
6	심판이사	500,000	15	사무국장	1,600,000
7	섭외이사	500,000	16	과장	600,000
8	이사	500,000	17	대리	600,000
9	이사	500,000	합계	17명	11,000,000

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대회 개최 관련 지방보조사업자 □□□□과 ■■■■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창녕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창녕군수로부터 승인받은 보조금 산출기초(사업계획)내역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나, 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과 같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였으며,

특히, 당초 계획에 없었던 숙식비 12,920천 원과 ○○대회 공동 주관단체인 ■■■■에 아무런 근거와 정당한 집행사유 없이 대회 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10,000천 원을 집행하였다.

■■■■도 다음과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창녕군수로부터 승인받은 보조금 산출기초(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대회 개최와 관련이 없는 □□□□ 임·직원 및 심판진에게 지급하기 위해 한우선물세트 등 기념품 구입비용 1,700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10,000천 원의 경우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회기간이 종료된 이후 대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운영비 용도로 집행하였고, 일부 금액(1,950천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 ■ ■ ■ ■ 보조금 집행결과 >

(단위 : 천원)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			정산 완료된 최종 집행결과			차액
연번	집행항목	금액(A)	연번	집행항목	금액(B)	(B-A)
1	행사운영요원 식대비	1,000	1	행사운영요원 식대비	4,599	3,599
2	대회운영 A보드(광고) 제작	10,000	2	대회운영 A보드(광고) 제작	10,000	-
3	자원봉사자 여비	1,040	3	자원봉사자 여비	1,300	260
4	물품 등 기타경비	1,340	4	물품 등 기타경비	2,121	781
5	응급구조사 인건비	6,650	5	응급구조사 인건비	6,650	-
6	운영요원(기록원,돌겟) 인건비	8,640	6	운영요원(기록원,돌겟) 인건비	8,220	-420
7	천막 등 임대료	5,522	7	천막 등 임대료	10,174	4,652
8	대회홍보 현수막	6,673	8	대회홍보 현수막	5,004	-1,669
9	대회운영 식대비	8,100	9	대회운영 식대비	4,213	-3,887
10	대회운영비 물품	6,810	10	대회운영비 물품	2,619	-4,191
11	임원단체복 등 물품	8,025	11	임원단체복 등 물품	7,200	-825
			변경	임직원심판 등 기념품(선물)	1,700	1,700
계		63,800	계		63,800	-

다. 대회 협찬업체와 부당한 물품구매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당해 ○○대회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이 대회 참가팀에 지원하기 위한 물품 구매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39,000천 원의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G2B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대회 후원업체인 @@@과 임의로 수의 계약하였다.

또한, 대회의 후원업체로 선정된 @@@과 ### 2개 업체의 경우 ○○대회가 개최되는 경기장에 보조금으로 설치한 A보드를 통해 대회기간 업체 광고가 이루어졌음에도 광고비 수입이 사업비 정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당한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예산(보조금) 낭비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창녕군 ★★★과에서는 대회 참가자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비목에서 1,880천 원의 음료와 과일을 구입하여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충분히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에게 1차 보조금 57,000천 원을 교부한 다음, A보드 광고판을 당초 8개에서 추가로 17개를 더 설치한다는 사유로 2차 보조금 6,800천 원(전체 A보드 설치비용 : 10,000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체 25개 A보드 중 18개만 광고(홍보)용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7개의 A보드는 활용하지 못하여 2,800천 원의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과 ■■■■는 다음과 같이 1회에 500천 원 이상의 식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 및 명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도하게 많은 식비 지출을 하였고, 선량한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 보조금으로 식비 과다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 □ □				■ ■ ■ ■			
일자	집행항목	식당	금액	일자	집행항목	식당	금액
'17.12.23.	임직원 식비		603	'17.12.28.	환영만찬		2,324
'18.12.27.	임직원 식비		919	'18.01.05.	운영식비		580
'18.01.05.	임직원 식비		2,100	'18.01.10.	운영식비		900
				'18.01.10.	연맹 간담회비		1,151
계	3건		3,622	계	4건		4,955

또한 창녕군 ★★★과에서는 앞서 언급된 보조사업자 □□□□과 ■■■■의 위법·부당한 보조금 정산서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처 분 요 구

- ① 창녕군수는 ○○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주사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 중 정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이 ■■■■에 지원한 10,000천 원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유원시설 내 ‘작은 동물원’ 설치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은 ○○○ 유원시설 내 ‘작은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 동물 입식비용 1억 원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국제 멸종위기종인 청금강 앵무새를 비롯하여 미어캣, 미니말 등 13종 195마리를 구입하여 사육시설에 입식하였으며, 2017. 11. 3. 개장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 작은 동물원 설치개요 >

사업장 소재지	시설 현황	입식 동물현황	사업기간	비 고
창녕군 ○○면	-동물사육장 등 4개동 -포토존과 트릭아트 등 설치 (사업비 : 2,000백만원)	13종 195마리	‘16년 6월 ~ ‘17년 4월	

※ 주요 입식 동물현황

- 멸종위기종 : 설가타육지거북(4), 사막여우(6), 청금강앵무새(1),
- 야생생물 수입·수출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고슴도치(10), 코아티(6)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제1항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을 수입이나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2. 살이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시설의 명세,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문인력의 현황, 6.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7.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야생생물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

창녕군 ☆☆☆과에서는 ○○○유원시설 내 설치한 ‘작은 동물원’에 입식할 동물을 구매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8의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할 경우 생존 환경과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관련부서(환경위생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창녕군 ☆☆☆과에서는 적정한 예정가격 작성 없이 동물 입식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억 원 그대로 집행품의를 받은 후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수입 허가 대상의 야생생물(고슴도치, 코아티)의 구매를 추진하면서도 수입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없이 구매한 후 동물원에 입식한 사실이 있다.

나. 동물원 미등록 운영

창녕군이 동물원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에 따라 시설의 명칭·소재지·명세, 전문인력 현황, 보유 생물종(멸종위기종 별도 표시)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내역과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녕군 ☆☆☆과에서는 ○○○유원시설 내 ‘작은 동물원’을 설치하여 2017. 11. 3. 개장하여 운영하면서도 관련 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처 분 요 구

① 창녕군수는 야생생물 반입·수입 및 동물원 등록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창녕군 ☆☆☆과 지방행정주사 △△△과 실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수입·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에 대하여 생존환경 및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 관련부서 허가(협의)를 받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기준공장면적률 미충족 업체의 공장등록 부당 처리 등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및 정확한 공장등록대장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에 따라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16조(공장의 등록) 따라 시장·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공장등록 신청서)에 따라 시장·군수는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제10조(공장의 등록) 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기준공장면적률 미충족 업체의 부당한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와 제16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공장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 적합할 경우 공장등록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녕군 &&&과에서는 @@@의 공장등록 신청에 대하여 공장건축면적의 적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해당 공장이 기준공장면적률 12%에 미달하는 10.83%임에도 2015. 9. 7. 등록완료 처리하였다.

< 기준공장면적률 미충족 업체 공장등록 부당처리 현황 >

(단위 : ㎡)

공장명	공장소재지	업종	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창녕군 ○○면	식초,발효 및 화학 조미료제조업(10741) 장류제조업(10743) 차류가공업(10792)	3,295.00	356.88	238.23	118.65

⇒ 공장건축면적률 10.83% = (238.23 + 118.65) / 3,295.00 ※ 기준공장면적률 : 12%

나. 공장등록대장 사후관리 부적정

창녕군은 등록된 공장이 폐업되거나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및 제10조(공장의 등록) 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녕군 &&&과에서는 별표1 ‘공장의 등록취소 대상 현황’과 같이 ☒☒ 산업(주) 창녕공장 등 7개의 등록된 공장이 폐업 또는 전체공장 임대 등 공장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등록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 창녕공장과 ### 2개소의 공장은 2008. 2. 20.과 2008. 10. 22.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으로서 공장으로 개발한 부지의 면적이 각각 10,288㎡와 17,227㎡이며, 공장부지를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창녕군 &&&과에서는 2개소의 공장이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타인에게 공장을 임대하여 새로운 공장등록 등 신청이 되었음에도 위법사실 안내 등 조치 없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처 분 요 구

① 공장등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창녕군 &&&과 지방시설주사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된 공장의 불법임대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공장에 대하여 등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도 투자심사 없이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추진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과, ◇◇◇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은 2006년부터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 유채단지 일원에서 □□□□□ 주관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전시, 체험 등 창녕낙동강유채축제를 개최하여 왔고, 2018년에는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13회 축제를 개최하였다.

<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예산 집행(편성)현황 (2014~2018년) >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편성)예산	주요 예산집행(편성) 내역	비 고
2014회계연도	559,639		
A과	246,873	축제지원 보조금(210,000), 포토존 홍보탑 설치 등	
B과	213,022	유채단지 조성 시설비(158,304), 사후관리 인건비(54,718)	
C과	67,896	TV, 일간신문 등 광고비	
D과	19,348	축제 지원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임차	
E과	12,500	유채꽃 길따라 건강걷기대회 보조금	
2015회계연도	610,746		
A과	275,751	축제지원 보조금(200,000), 곤충조류체험관, 한복패션쇼 등	
B과	200,435	유채단지 조성 시설비(129,783), 사후관리 인건비(70,652)	
C과	92,950	TV, 일간신문 등 광고비	
D과	19,710	축제 지원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임차	
E과	12,500	유채꽃 길따라 건강걷기대회 보조금	
00읍	9,400	유채단지 정비 시설비	
2016회계연도	1,041,637		
A과	393,007	축제지원 보조금(200,000), 무궤도 열차(120,000), 곤충 한복 등	
B과	476,962	유채단지 조성 시설비(336,445), 사후관리 인건비(140,517)	
C과	107,080	TV, 일간신문 등 광고비	
D과	32,442	축제 지원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임차	
00읍	32,146	유채단지 정비 시설비	
2017회계연도	1,251,468		
A과	312,953	축제지원 보조금(212,000), 곤충체험관, 홍보탑, 기타시설 등	
B과	664,909	유채단지 조성 시설비 등(437,159), 사후관리 인건비(227,750)	
C과	112,672	TV, 일간신문 등 광고비	

D과	47,390	축제 지원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임차	
E과	2,000	유채꽃 길따라 건강걷기대회 보조금	
00읍	111,544	유채단지 정비 시설비 등	
2018회계연도	1,371,490		
A과	299,753	축제지원 보조금(250,000), 행사운영비 (26,500), 포토존 등	예산편성 또는 집행금액
B과	943,437	유채단지 조성 시설비 등(569,660), 사후관리 인건비(373,777)	
C과	84,550	TV, 일간신문 등 광고비	
D과	43,750	축제 지원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임차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및 제37조(투자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에 따라 시·군의 경우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시·도의뢰 심사를 거쳐야 하고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심사의 기준이 되는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시행('16. 6. 30.)으로 개정 이전까지 시·군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은 3억 원 ~ 5억 원이며, 개정·시행된 2016. 6. 30.이후부터는 1억 원 ~ 3억 원이 적용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 추진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의 경우 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다만, 2016회계연도 예산 편성까지는 5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창녕군은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2014회계연도 5.6억 원, 2015회계연도 6.1억 원, 2016회계연도 10.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어 투자심사가 강화된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앞서 이루어진 투자심사는 축제 담당부서인 &&&과에서 주관단체인 □□□□□에 교부하는 보조금액 2억 원만을 대상으로 군 자체심사(2016. 11. 10.)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축제에 투자된 전체 예산은 12.5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도 의뢰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6개 부서에 예산을 분할하여 편성·집행함에 따라 형식적인 자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축제의 개최 횟수를 거듭할수록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재정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 분 요 구

① 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창녕군 @@@과 지방행정주사 △△△과 실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보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앞으로 행사·축제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시정요구

제 목 공장설립등 및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2018년 기간중에 총 92건의 공장설립(창업) 승인하였다.

2018년 종합감사기간 이전 2008. 6. 26. △△군 △△면 △△리 00번지 외 00필지 (공장부지 00㎡) AA산업(대표 김○○)에 대하여, 사도개설허가, 하천점용허가,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통한 진입도로(L=600.8m B=6.0m)를 포함한 최초 공장설립등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상기 허가지 인근에 (주)BB산업(대표 곽○○) 등 5개사가 위 공장의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승락을 득하여 공장설립등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15~2018년 기간 중 AA산업의 공장설립 등 승인을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CC기업(대표 오○○)과 DD(대표 이○○)의 사용 승낙을 받아 공장설립등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한 현황은 아래 표 【CC기업, DD의 진입도로 사용승락 후 공장 승인 현황】와 같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부동산개발업법 등록 관계 법령(업무처리 기준)

舊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시행 2007. 11. 18.)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금지행위)에서 부동산개발업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벌칙)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한 자, 제20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에서 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인허가 면적기준으로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인허가 신청자가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규모(건축연면적 2,000㎡, 토지면적이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인허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동산 개발을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준공)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보며,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의3(제조시설의 승인)에서 군수가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 또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완료신고의 수리) 시에도 개별법에 따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보며, 검사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 후 하천점용, 개발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목적 외 사용승인)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사후관리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의 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2년)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제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설립등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농지전용 포함 2년)간 공장의 착공하지 않거나(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 포함), 승인 후 4년이 경과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명령 등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부동산개발업법 비등록업체 변경 승인 등 부적정

창녕군 ○○과에서는 2008. 6. 26. △△면 △△리 00번지 AA산업(대표 김○○)의 공장설립등 승인건이 건축 연면적(공장 제조시설면적)이 3,790㎡이고, 토지 개발면적(공장 부지면적)이 20,007㎡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후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초 AA산업(대표 임○○)에서 2009. 6. 30. BB기업(대표 오○○), 2010. 3. 8. BB기업(대표 오○○)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인허가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2010. 3. 8. BB기업의 공장제조시설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부를 매매하였고, 2013. 7. 11. 해당 부지에 DD(대표 이○○)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변경 승인하여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업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하여 공급목적으로 부당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AA산업 공장설립 승인 후 업체 변동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신청일자	승인일자	업종	부지면적 (제조시설)	공장 착공일자	공장 준공일자	창업 여부
1	AA산업 (임○○)	2008.03.13	2008.06.26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20,007 (3,790)	2008.06.26	-	일반
2	BB기업 (오○○)	2009.06.30	2009.07.02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20,007 (3,790)	2009.07.02		일반
3	BB기업 (오○○)	2009.12.21	2010.01.25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10,903 (1,800)	2010.01.25	-	일반
4	BB기업 (오○○)	2010.03.08	2010.03.12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10,779 (1,800)	2010.03.12		일반
5	BB기업 (오○○)	2012.10.08	2012.10.29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10,779 (1,800)	2012.10.29	-	일반
6	CC기업 (오○○)	2013.05.14	2013.05.16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9,155 (1,750)	2013.05.16	-	일반
	DD (이○○)	2013.07.09	2013.07.11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8,059 (1,400)	2013.07.11	2014.9.15	창업
7	CC기업 (오○○)	2016.03.28	2016.04.14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9,155 (2,475)	2016.04.14	-	일반

또한, 창녕군 ○○과에서는 2015~2018년 기간동안 창업사업계획 승인한 92건 중 아래 표와 같이 총 4건의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변경 승인하여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업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하여 공급목적으로 부당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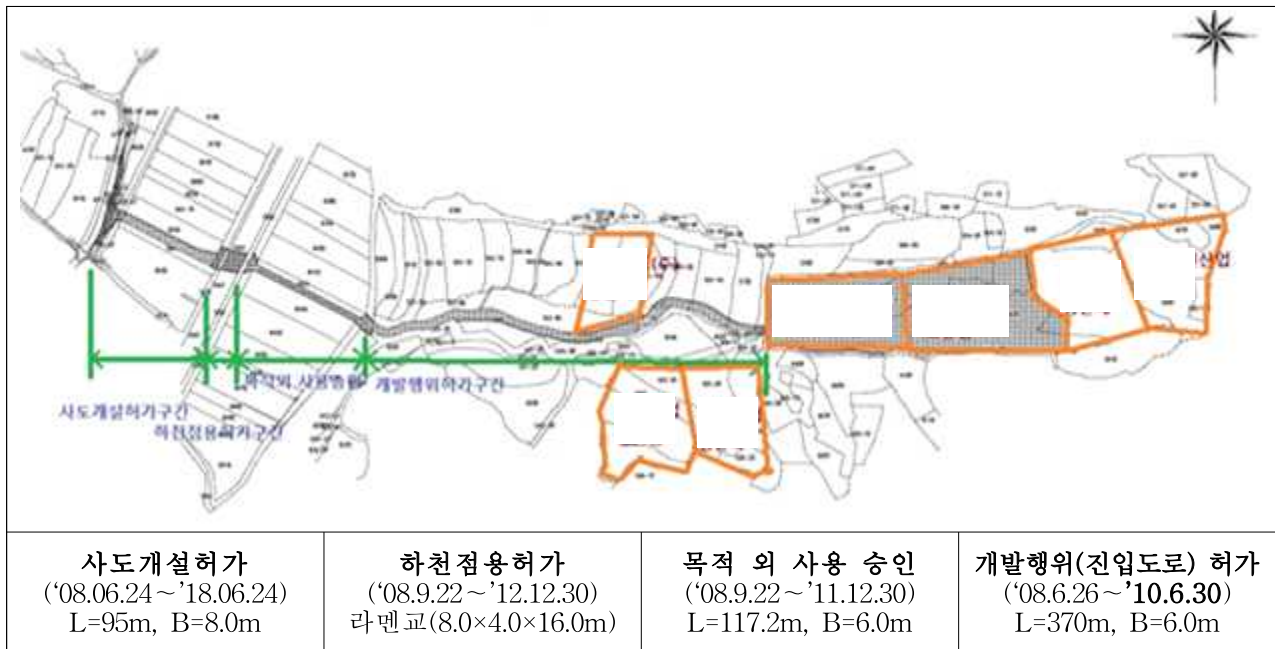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업체 창업사업계획(공장등록등) 변경 승인 현황】

연번	업체명(대표자)		승인일자	업종	부지면적 (제조시설)	공장 착공일자	공장 준공일자	창업 여부
	당 초	변 경						
1	(주)EE테크 (정○○)	II(주) (진○○)	2015.10.27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12,457 (3,424.7)	2015.10.27	-	창업
2	FF개발(주) (송○○)	JJ ENG (박○○)	2016.05.04	표면가공목재및특정 목적용제재목제조업	8,820 (900)	2016.05.04	-	창업
3	GG공업사 (이○○)	(주)KK (이○○)	2017.05.22	그외자동차용신품 부품제조업	15,243 (1,200)	2017.05.22	-	창업
4	(주)HH테크 (박○○)	LL테크 (이○○)	2017.06.29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24,880 (3,174)	2017.06.29	-	일반

나. 공장설립등(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창녕군 ○○과에서는 2008. 6. 26. △△면 △△리 00번지 AA산업(대표 김○○)의 공장설립등 승인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 하천점용,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등) 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중인 농업기반시설(구거)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 9. 15. DD(대표 이○○)의 공장설립등 사용승인(준공)하였다.

【AA산업 공장설립 승인 현황(진입도로 개설계획 포함)】



그러나, 공장 진출입로 목적외 목적외 사용승인 기간과 하천점용 허가기간,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등) 허가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실제적으로 허가지의 진입도로가 개발행위 허가가 종료된 2010. 6. 30. 이후 단절되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2014. 9. 15. DD의 공장설립의 사용승인 처리하였다.

또한, 감사기간 중 당초 허가지의 진입도로 개설 계획(L=600.8km) 중 사도개설 및 하천점용 허가 구간(L=111m)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농업기반

시설인 구거를 이설하고 기존 농로를 확장하여 콘크리트 포장(L=117.2m, B=6.0m) 후 각종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구거 이설 및 농로 확장 등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2014. 9. 15. DD의 공장설립의 사용승인 처리하였다.

【공장 진입도로(사도개설 허가 구간) 현황】



【공장 진입도로(하천점용(교량신설) 허가 구간) 현황】



【공장 진입도로(목적외 사용 승인 구간) 현황】



【공장 진입도로(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등) 허가 구간) 현황】



그리고, 창녕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6. 3. 7. FF(대표 이○○) 등 6건의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승인에 따른 진입로 확보계획을 AA기업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진출입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천점용 허가기간, 목적의 사용승인기간,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등) 허가기간 등이 종료되어 진입도로가 단절된 상태임에도 진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기업, DD의 진입도로 사용승락 후 공장승인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신청일자	승인일자	업종	부지면적 (제조시설)	공장 착공일자	공장 준공일자	창업 여부
1	FF (이○○)	2016.03.07	2016.5.02	그 외기타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제조업	7,576 (900)	2016.05.02	-	창업 (취소)
	주GG산업 (곽○○)	2016.12.27	2017.1.11	표면가공목재및특정목 적용제재목제조업	7,576 (986)	2017.01.11	-	일반 (취소)
2	HH주 (정○○)	2017.12.18	2017.12.28	일반제재업	4,974 (918)	2017.12.28	-	일반
3	JJ산업 (정○○)	2017.04.04	2017.4.26	그 외기타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제조업	4,770 (1,375)	2017.04.26	-	창업
	KK산업 (정○○)	2017.04.10	2017.5.11	그 외기타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제조업	4,746 (1,375)	2017.05.11	-	창업
4	주LL (김○○)	2017.05.02	2017.5.19	어망및기타끈가공품 제조업	8,137 (1,458)	2017.05.19	-	창업

다.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사후관리 부적정

관련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농지전용 포함 2년)간 공장의 착공하지 않거나(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 포함), 승인 후 4년 이 경과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창녕군 ○○과에서는 위 【AA산업 공장설립 승인 후 변동 현황】과 같이 2012. 10. 29. BB기업(대표 오○○)으로 최종 인허가 변경한 공장설립등 승인 건에 대하여 5년 6개월이 경과한 감사일현재까지 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징계요구 양정 2015. 10. 27. (주)CC테크 등 4개사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업체에 대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인허가를 변경 승인하여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급목적으로 부당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4. 9. 15. DD(대표 이○○)의 진입도로가 각종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도로가 단절된 상태임에도 사용승인(준공) 처리하였고, 2016. 3. 7. FF(대표 이○○) 등 6개사에 대하여 추가로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리하였고, 2012. 10. 29. AA기업(대표 오○○)으로 최종 인허가 변경한 공장설립 승인건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과(現 ○○) 실무담당자 지방◇◇◇◇ 최○○ 및 ○○과 실무책임자 지방◇◇◇◇ 김○○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① 창녕군수는 공장설립등 및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과(現 ○○) 실무담당자 지방◇◇◇◇ 최○○ 및 ○○과 실무책임자 지방◇◇◇◇ 김○○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승인 건에 대한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한 ○○과(現 ○○) 감독책임자 지방◇◇◇◇ 김○○ 및 ○○과(現 ○○) 지방◇◇◇◇ 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징계·훈계)

② 창녕군수는 2009. 6. 30.부터 2017. 6. 29.까지 △△군 △△면 △△리 00번지 (주) BB기업 등 5개사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장설립등 승인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각종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진입도로가 단절된 상태임에도 공장 사용승인(준공) 처리한 DD와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공장설립등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한 4개사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10. 29. 공장설립등 승인 후 5년 6개월이 경과한 AA기업(대표 오○○)에 대하여는 “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주의요구

제 목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건축허가 등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등의 허가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2018년 기간 동안 446건의 건축허가, 1,427건의 건축신고, 5건의 다세대주택 허가, 48건의 다가구주택 허가 등 총 1,926건의 건축허가·신고 신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하였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진입도로 관계 법령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및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다음 제3호나목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고,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이상, 5천㎡ 이상 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 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3)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지침 3-2-5(기반시설) 제(1)호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의미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괄호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고,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시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러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신청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 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관계 법령

「국토계획법」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에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2-1에서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고, 2-2-3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창녕군계획 조례」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진입도로 산정 부적정

창녕군 ○○과에서는 △△읍 △△리 00번지 주○○이 서로 접한 필지에 신청한 6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규모가 3,255㎡로 관련규정에 따라 진입도로의 최소 폭 4.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현황도로(폭 3m미만)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허가하였다. (※ 아래 【표2. 임○○ 허가지(농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 【표6. 박○○ 허가지(산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5건의 개발행위 허가도 동일한 유형)

【표1. 주○○ 허가지(농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연번	허가현황				
	피허가자	소재지	목적	기간	개발행위 규모(m2)
소 계			6건		3,255
1	주○○	△△읍 △△리 87	단독주택	2016.02.16. ~ 2018.02.15.	465
2	주○○	△△읍 △△리 87	단독주택	2016.02.16. ~ 2018.02.15.	465
3	주○○	△△읍 △△리 87	단독주택	2016.02.16. ~ 2018.02.15.	492
4	주○○	△△읍 △△리 87 외1	단독주택	2016.02.16. ~ 2018.02.15.	470
5	주○○	△△읍 △△리 87 외1	단독주택	2016.02.16. ~ 2018.02.15.	471
6	주○○	△△읍 △△리 87 외1	단독주택	2016.02.16. ~ 2018.02.15.	892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 현황도로 L=1,800m, B=40m(일부 L=260m, B=3m) ⇒ 진입도로 최소 폭 B=4.0m 이상

【표2. 임○○ 허가지(농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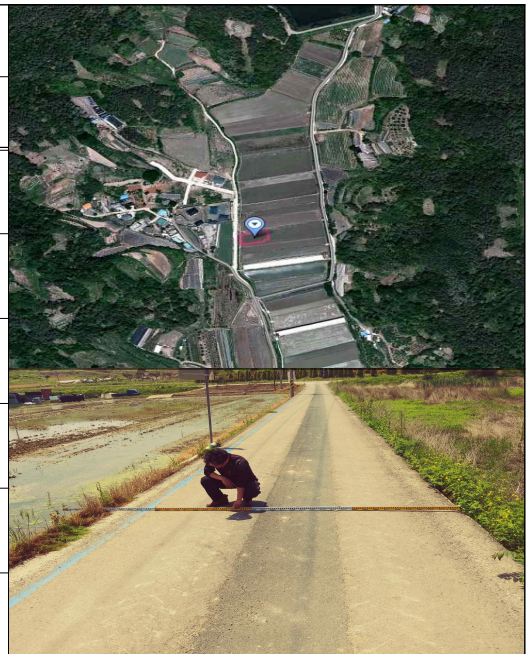
연번	허가현황				
	피허가자	소재지	목적	기간	개발행위 규모(m2)
소 계			10건		6,029
1	임○○	△△면 △△리 640-1	단독주택	2016.02.25. ~ 2018.02.24	453
2	임○○	△△면 △△리 640-1	단독주택	2016.03.24. ~ 2018.02.23	443
3	임○○	△△면 △△리 640-1	단독주택	2016.03.24. ~ 2018.02.23	477
4	임○○	△△면 △△리 640-1	단독주택	2016.03.24. ~ 2018.02.23	563
5	임○○	△△면 △△리 640-1	단독주택	2016.03.24. ~ 2018.02.23	599
6	임○○	△△면 △△리 640-1 외 1	단독주택, 진입로	2016.03.24. ~ 2018.02.23	1,576
7	박○○	△△면 △△리 640-8	단독주택	2016.05.19. ~ 2018.05.18	435
8	박○○	△△면 △△리 640-8	단독주택	2016.05.19. ~ 2018.05.18	475
9	박○○	△△면 △△리 640-8	단독주택	2016.05.19. ~ 2018.05.18	527
10	박○○	△△면 △△리 640-8	단독주택	2016.05.19. ~ 2018.05.18	661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 현황도로 L=270m, B=5~6m(일부 L=50m, B=3m) ⇒ 진입도로 최소 폭 B=6.0m 이상

【표3. 노○○ 허가지(농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연번	허가현황				
	피허가자	소재지	목적	기간	개발행위 규모(m2)
소 계			5건		2,829
1	노○○	△△면 △△리 99	단독주택	2015.11.10. ~ 2017.11.09.	543
2	노○○	△△면 △△리 99	단독주택	2015.10.29. ~ 2017.10.28.	558
3	노○○	△△면 △△리 99	단독주택	2015.11.06. ~ 2017.11.05.	606
4	노○○	△△면 △△리 99	단독주택	2015.10.28. ~ 2017.10.27.	545
5	노○○	△△면 △△리 99	단독주택	2015.10.28. ~ 2017.10.26.	577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 현황도로 L=1,800m, B=40m(일부 L=260m, B=3m) ⇒ 진입도로 최소 폭 B=4.0m 이상

【표4. 이○○ 허가지(농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연번	허가현황				
	피허가자	소재지	목적	기간	개발행위 규모(m2)
	소 계		2건		1,578
1	이○○	△△면 △△리 632	단독주택	2015.12.31. ~ 2017.12.30.	992
2	이○○	△△면 △△리 632-1	농업용창고	2016.07.30. ~ 2018.07.29.	586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 현황도로 L=100m, B=3m ⇒ 진입도로 최소 폭 B=4.0m 이상

【표5. 이○○ 허가지(농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연번	허가현황				
	피허가자	소재지	목적	기간	개발행위 규모(m2)
	소계		8건		4,010
1	이○○	△△면 △△리 589-14 외1	단독주택	2016.01.15. ~ 2018.01.14.	562
2	이○○	△△면 △△리 632 외1	단독주택	2016.01.15. ~ 2018.01.14.	485
3	이○○	△△면 △△리 632 외1	단독주택	2016.01.15. ~ 2018.01.14.	485
4	박○○	△△면 △△리 632 외1	단독주택	2016.01.15. ~ 2018.01.14.	539
5	박○○	△△면 △△리 633-7	단독주택	2017.02.16. ~ 2019.02.15.	440
6	박○○	△△면 △△리 633-6	단독주택	2017.02.16. ~ 2019.02.15.	473
7	박○○	△△면 △△리 633-5	단독주택	2017.02.16. ~ 2019.02.15.	531
8	박○○	△△면 △△리 633-4	단독주택	2017.02.16. ~ 2019.02.15.	495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 도로개설 L=800m, B=6m(일부 L=180m, B=3m) ⇒ 진입도로 최소 폭 B=4.0m 이상

【표6. 박○○ 허가지(산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연번	허가현황				
	피허가자	소재지	목적	기간	개발행위 규모(m2)
	소계		5건		2,380
1	김○○ 외 1인	△△면 △△리 633-4632	단독주택, 진입로	2016.01.14. ~ 2019.01.13	441
2	박○○	△△면 △△리 633-1	단독주택	2017.02.02. ~ 2020.01.31	440
3	박○○	△△면 △△리 633-1	단독주택	2017.02.02. ~ 2020.01.31	473
4	주○○	△△면 △△리 633-6	단독주택	2017.02.02. ~ 2020.01.31	531
5	박○○	△△면 △△리 633-1	단독주택	2017.02.02. ~ 2020.01.31	495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 현황도로 L=1,300m, B=6m(일부구간 L=180m, B=3m) ⇒ 진입도로 최소 폭 B=4.0m 이상

징계요구 양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에 따라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신청한 개발행위 규모 산정 및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처리하고, 연접한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총 공사비의 20%를 이행보증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개별 허가건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한 후 1,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총 18,743천원의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現 ○○) 실무담당자 지방◇◇◇◇ 김◎◎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① 창녕군수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과(現 ○○) 실무담당자 지방◇◇◇◇ 김◎◎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허가(협의) 건에 대한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책임자 지방◇◇◇◇ 신◎◎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징계·훈계)

② 창녕군수는 향후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1-7(허가처분 및 통지) 및 3-3-2(계획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신청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전체를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고, 기반시설(진입도로 최소폭 이상)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별 건축허가로 잘못 판단하여 면제한 이행보증금 18,743천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협의)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2015~2018년 기간 동안 446건의 건축허가, 1,427건의 건축 신고, 5건의 다세대주택 허가, 48건의 다가구주택 허가 등 총 1,926건의 건축허가·신고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등의 허가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에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시기는 [별표 4]와 같고,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서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⁵⁾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

구 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 제2항에서는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 5,000㎡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동일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인허가 이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인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과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인 △△면 △△리 00번지 일원에 실질적인 동일인 임○○, 박○○ 등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사업을 허가(협의)하면서, 사업면적의 합이 6,209㎡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의 허가(협의)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관련 부서(○○과)에 통보하지 않고 건축허가 하였다.

또한, △△면 △△리 산00번지 동일사업자 김○○, 박○○의 6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부서(○○과)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건축 허가(협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협의) 부적정 현황】

연 번	신청자		건축허가 소재지	허가일자	허가면적(㎡)			건축 용도	용도 지역	비고
	성명	주 소			소계	건축 부지	기반 시설			
합 계			3개소		20,232	19,349	883			
소 계			10건		6,209	5,326	883			
1	임○○	△△시 △△구 △△로 00길 00	△△면 △△리 00	2016.02.25	453	453		단독주택	보전 관리	
2	임○○	△△시 △△구 △△로 00길 00	△△면 △△리 00	2016.03.24	443	443		단독주택	보전 관리	
3	임○○	△△시 △△구 △△로 00길 00	△△면 △△리 00	2016.03.24	477	477		단독주택	보전 관리	
4	임○○	△△시 △△구 △△로 00길 00	△△면 △△리 00	2016.03.24	563	563		단독주택	보전 관리	
5	임○○	△△시 △△구 △△로 00길 00	△△면 △△리 00	2016.03.24	599	599		단독주택	보전 관리	
6	임○○	△△시 △△구 △△로 00길 00	△△면 △△리 00	2016.03.24	1,576	693	883	단독주택, 진입로	보전 관리	
7	박○○	△△시 △△군 △△면 △△ 00길 00	△△면 △△리 00	2016.05.19	435	435		단독주택	보전 관리	미협의
8	박○○	△△시 △△군 △△면 △△ 00길 00	△△면 △△리 00	2016.05.19	475	475		단독주택	보전 관리	
9	박○○	△△시 △△군 △△면 △△ 00길 00	△△면 △△리 00	2016.05.19	527	527		단독주택	보전 관리	
10	박○○	△△시 △△군 △△면 △△ 00길 00	△△면 △△리 00	2016.05.19	661	661		단독주택	보전 관리	
소 계			6건		6,148	6,148	0			
1	김○○ (차○○)	△△군 △△면 △△길 00	△△면 △△리 산00	2011.03.09. (2015.10.08.)	812	812		단독주택	보전 관리	
2	김○○ (신○○)	△△군 △△면 △△길 00	△△면 △△리 산00 외 2	2011.03.09. (2015.10.08.)	2,524	2,524		단독주택, 진입로	보전 관리	
3	김○○ (임○○)	△△시 △△동 △△로 00	△△면 △△리 산00	2011.03.09. (2015.10.08.)	805	805		단독주택	보전 관리	

연 번	신청자		건축허가 소재지	허가일자	허가면적(m ²)			건축 용도	용도 지역	비고
	성명	주 소			소계	건축 부지	기반 시설			
4	박○○ (이○○)	△△시 △△로 △△길 00	△△면 △△리 산△△	2011.03.09. (2015.10.08.)	640	640		단독주택	보전 관리	
5	박○○ (이○○)	△△시 △△로 △△길 00	△△면 △△리 산△△	2011.03.09. (2015.10.08.)	657	657		단독주택	보전 관리	
6	박○○ (이○○)	△△시 △△로 △△길 00	△△면 △△리 산△△	2011.03.09. (2015.10.08.)	710	710		단독주택	보전 관리	
소 계			6건		7,875	7,875	0			
1	배○○	△△시 △△구 △△동 △△로 00	△△면 △△리 산00	2010.10.27. (2017.04.21.)	1,021	1,021		단독주택	보전 관리	
2	배○○	△△시 △△구 △△동 △△로 00	△△면 △△리 산00	2010.10.27. (2017.04.21.)	2,498	2,498		단독주택	보전 관리	
3	배○○	△△시 △△구 △△동 △△로 00	△△면 △△리 산00	2010.10.27. (2017.04.21.)	1,175	1,175		단독주택	보전 관리	
4	배○○	△△시 △△구 △△동 △△로 00	△△면 △△리 산00	2010.10.27. (2017.04.21.)	1,111	1,111		단독주택	보전 관리	
5	배○○	△△시 △△구 △△동 △△로 00	△△면 △△리 산00	2010.10.27. (2017.04.21.)	1,031	1,031		단독주택	보전 관리	
6	배○○	△△시 △△구 △△동 △△로 00	△△면 △△리 산00	2010.10.27. (2017.04.21.)	1,039	1,039		단독주택	보전 관리	

조치할 사항 ① 창녕군수는 소규모영향평가 미이행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협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최○○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창녕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를 위반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수사과, 환경평가과)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축허가에 따른 지방도 연결허가(협의)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2014. 9. 11. △△면 △△리 산00 외 2 광○○이 신청한 다세대주택, 2014. 9. 11. 광○○가 신청한 다세대주택(2동, 32세대)의 복합민원에 대하여 2014. 9. 12. 개별법에 따른 협의 요청하였고, ○○과에서 2014. 9. 24. 위 신청지의 진입도로와 관련한 지방도1034호선의 도로 점사용 허가(협의)에 관하여 회신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및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서 동 지역에 있는 구간을 제외한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는 시·도지사가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이 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연결계획서, 변속차로 및 부대시설 등 설계도면 포함)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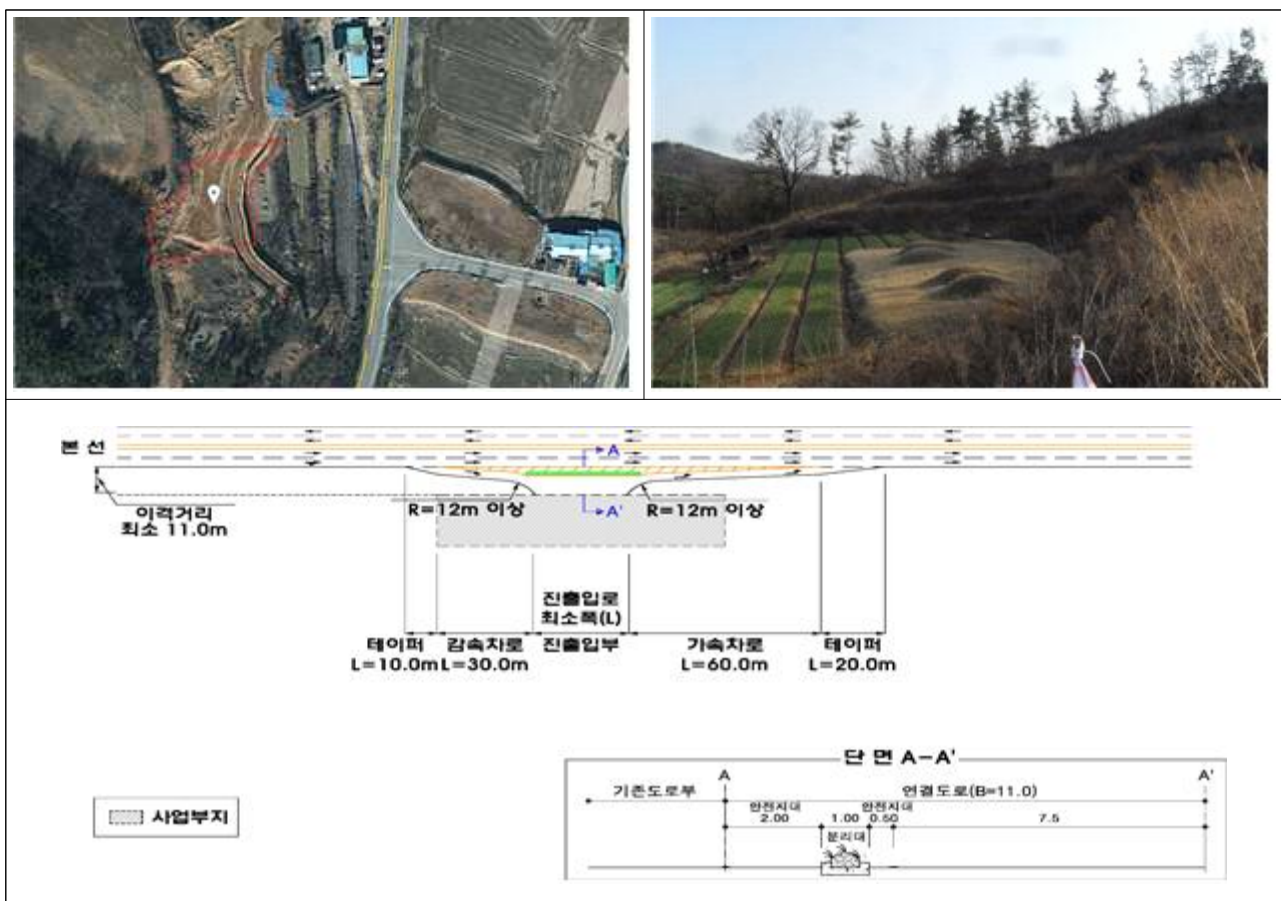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서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별표 1] 권한위임사항에서 도로과 소관의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및 변경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녕군 ○○과에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허가(협의)하는 경우 기존 진입로를 활용하거나, 관련규정에 따른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하여야 하며, 지방도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허가(협의)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과에서는 2014. 9. 11. △△면 △△리 산00 외 2필지에 서로 접한 필지에 동일사업자(곽○○, 곽○○ 남매)가 신청한 2건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기존에 활용하던 진입로가 없어, 지방도 1034호선에서 신청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지방도 연결허가(협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토록하여 이에 대한 검토 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허가(협의)하여야 함에도 2014. 9. 24.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협의 의견 회신 시 “기존 도로부지로 진출입을 할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실제로는 진출입로가 없어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건축허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신청지 현황 및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



조치할 사항 ① 창녕군수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지방도 연결허가(협의)에 대한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한 ○○과 실무책임자 지방◇◇◇◇ 김○○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도로법」,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면 △△리 산00 외 2필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에 대하여 진입로(폭 6m 이상) 개설에 따른 “지방도 연결 허가(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확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실, ★★★★★★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실과 및 ★★★★★★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 종사자의 호봉확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고, 기타 사업별 개별 지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마련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여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현 시설 근무경력에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100%)과 기타 유사경력(80%)을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채용된 종사자의 호봉을 확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채용 전 경력에 대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여 종사자의 호봉을 확정하여야 하고, 창녕군 ☆☆☆☆☆☆☆실과 ★★★★★★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이 지침과 다르게 산정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창녕군○○○○○○○○에서는 위생원으로 채용된 공●●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①◎◎백화점에서 근무한 경력과, ②◇◇◇◇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력인데도, 이를 유사경력 80%를 인정 11년 7월의 경력을 과다 산정하여 인건비(보조금) 26,551천원을 과다하게 지급(적립)하였고,

◆◆◆◆에서는, 시설장으로 특별채용된 김□□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①■■■■■■■■협회(△△지회)에서 도시가족계획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③ ▨▨▨▨▨▨전문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력인데도, 이를 유사경력 80%를 인정 12년 2월의 경력을 과다 산정하여 인건비(보조금) 23,922천원을 과다하게 지급(적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실 지방♠♠♠♠♠♠ 최♠♠, ☆☆☆☆☆☆☆실 지방♠♠♠♠♠♠ 박♥♥, ☆☆☆☆☆☆☆실 지방♠♠♠♠♠♠ 정◎◎, ☆☆☆☆☆☆☆실 지방♠♠♠♠♠♠ 강◆◆, ★★★★★★과 지방♠♠♠♠♠♠ 김▣▣, ★★★★★★과 지방♠♠♠♠♠♠ 성●●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과다지급된 인건비는 “회수”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호봉 재확정)”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및 차입금 상환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재산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별표 5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시설회계)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에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시설 설치·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을 1년 이상 차입하고자 할 경우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차입했어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16. 8. 3. ●●●●은행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연 11%의 이자율로 차입하여 시설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법인의 회계와 시설의 회계는 구분하여야 하고, 법인이 차입하여 시설 설치·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차입금은 시설의 회계로 상환할 수 없는데도, ◎◎◎◎◎◎◎◎센터(시설)에서는 ○○○○○○○(법인)의 차입금 1억 3천만 원 중 89,376천 원을 시설회계로 지출(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요양원(시설)에서도, '16. 10. 17. ◆◆◆◆◆(법인)에서 증축공사를 위해 법인의 이사에게 차입한 차입금 35,000천 원 중 26,500천 원을 시설 회계로 지출(상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김▲▲, ★★★★★★과 지방△△△△△△△ 성▽▽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시설의 회계를 법인의 회계와 구분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차입금을 시설회계로 상환한 '◎◎◎◎◎◎◎◎센터'와 '◇◇◇◇요양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상환한 차입금을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자 선정(재위탁)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실, ★★★★★★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실과 ★★★★★★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4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은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공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녕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11조(위탁기간) 및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現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 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 평가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실과 ★★★★★★과에서는, 창녕군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창녕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위탁만료 3개월 내지 6개월 이전에 위탁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수탁 등 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창녕군 ☆☆☆☆☆☆☆실과 ★★★★★★과에서는 창녕군이 설치한 창녕군○○○○○○○ 등 4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위탁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수탁 기관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위탁기간 만료 직전(위탁만료 8~36일 前) 선정심의위원회만 개최하여 재위탁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실 지방●●●●이◎◎, ★★★★★★과 지방●●●● 공◇◇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법령에서 정한 최소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 중인 “창녕군 □□□□ □□□□”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법정 최소 운영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 하시기 바라며, (시정)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훈계요구

제 목 포상금 등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과)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예산관계법령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비목(303-01목)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나 2015년~2018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포상금 예산 총○○건 ○○○천원을 편성하여 이 중 총 ○○○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법령 및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가능하나 2015년~2018년 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천 원을 집행하였다.

2. 포상금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6조제2항 [별표12]에는 포상금 비목(303-01)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상금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편성 및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창녕군 @@@@과에서는 2015년~2018년 까지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총 ◆건 ○○○천 원의 부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이 포상금 총 ○○○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하기 위하여 창녕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제13조에는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창녕군 @@@@과에서는 2015년~2018년 창녕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 법령 및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법령·조례의 근거 없이 편성된 민간위탁 예산을 집행하면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위탁계약 절차 등 관련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민간위탁 부실을 초래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창녕군수는 앞으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법령·조례에 근거 없는 포상금 및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등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과 전 실무책임자 행정 ○급 ●●●(현 @@@@과), @@@@과 실무담당자 행정○급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훈계요구

제 목 직원 ■■■행사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명목으로 매년 관련예산 ○○백만원을 편성한 후 ‘직원 ■■■계획’을 수립(부서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각 부서별 ◎◎과 그 ●● 인원수대로 각 부서 주무담당계장(또는 서무담당자)에게 일괄 현금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직원 ■■■ 행사예산을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제2항에는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세출예산 과목구분’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세출예산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을 두어 각 비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는 기본업무 수행, 각종 훈련, 현안 업무추진, 야간근무, 휴일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되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

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국가단위행사,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에 집행하며 행사나 세미나 등에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33조에는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는 1. 계좌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현금 취급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과에서는 조직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 참여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를 추진하면서 매년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 한 후 ‘직원 ■■■ 계획’을 수립(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 한 사람당(●● 1명 포함) ○○천 원(◎◎ ○○천 원, ●● ○○천 원)씩 지급하면서 ◎◎에게 지급하는 경비(예산과목 : ■■■■)는 부서별 예산범위 내 현금영수증카드 집행 후 지출서류를, ●●에게 지급하는 경비(예산과목 : ■■■■■■ ■■■)는 부서별 보상금 수령내역서를 @@과로 제출하면 @@과에서 해당 부서 주무담당계장(또는 서무담당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입금(◆년간 ○○명 ○○○천 원) 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 당일 관외출장으로 여비를 지급(급량비 중복 총 ○○○천 원 - ‘15년 ◇명 ○○천원, ‘16년 ◇명 ○○천 원, ‘17년 ◇명 ○○천 원) 하는 등 관련법령과 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창녕군수는 관외출장비(식비)와 중복 지급된 급량비 ○○천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부적정한 직원 MT 행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과 실무책임자 행정 ○급 ●●●, 행정과 전 실무책임자 행정○급 ●●●(현 @@과), 행정과 실무담당자 행정○급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가. ○○군 ●●과에서는 2014. 12. 26. ★★ ★ 외1(●●면 ◇◇리 832-1, 전 1,686㎡ 농막) 등 23명의 건축물 취득세 부과시 농지세율인 3%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고,

2017. 5. 24. (주)△△△(과읍 ∇리 1042-11 대지 147㎡ 공장용지) 등 3명의 공장용지와 건축물 및 2014. 1. 8. §§§(과읍 ♥♥리 650번지 ◆◆상가아파트 1동 303호 76.59㎡) 등 13명의 주택 취득세 부과시 주택유상거래 세율인 1%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2015. 12. 31. (유)目目상사의 대표이사 ㄹㄹㄹ이 소유한 주식은 20%였으나, 2016. 12. 31. 아들 과과과가 주식을 80% 취득하면서 ㄹㄹㄹ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80%로 증가하였다.

다. 2013. 3. 21. (주)ΣΣΣ가 과읍 ○○리 550번지 2,142㎡를 전에서 답으로 지목 변경하는 등 42명이 지목을 변경하였다.

라. 2017. 4. 5. ◇◇영농조합법인은 과군 ※※면 ☆☆리 115-1번지의 2필지를 취득하는 등 총 3명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마. 과군 ÅÅ면 ¢¢리 477-3번지 88.26㎡를 소유한 ¥¥¥이 2015. 7. 30. 사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과군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85명이 사망하였다.

바. 2015년 \$ \$ \$는 농업보조금 600,000천원을 지원받아 ㄱ ㄱ 군 % %면 & &로 48-49번지에 상황버섯음료 가공체험시설을 신축하여 취득세 과표를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등 17명이 농업보조금등 지원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한 사항

가. 취득세 세율 적용 부적정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면서 농지는 1천분의 30,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 유상거래 취득세는 6억원 미만은 1%, 그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12. 26. ■■■ 외 1인이 ▷▷면 ◆◆리 832-1, 전 1,686㎡ 농막을 취득 후 취득세 신고하였으나, 농막은 건축물로 보아 농지의 세율인 4%로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농막을 농지로 보아 세율을 3%만 적용하여 1%로 계산한 취득세를 누락하는 등 23건, 17,990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7. 5. 24. (주)ΣΣ가 ㄱ ㄱ 읍 ▯리 1042-11번지 대지 147㎡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4%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인 1%를 잘못 적용하여 차액 세율 3%로 계산한 취득세를 누락하는 등 3건, 20,463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4. 1. 8. ☼☼☼은 ㄴㄴ읍 ㄴㄴ리 650번지 §§상가아파트 1동 303호 76.59㎡를 취득 후 ★★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주택유상거래 취득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인결과 ☼☼☼과 서○○는 부부로 배우자 간의 취득은 증여로 보아 취득세 세율은 3.5%로 적용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 세율을 1%로 적용하여야 하나, 대가를 지급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유상거래 세율인 1%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차액 세율인 2.5%로 계산한 취득세를 누락하는 등 13건, 22,716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취득세 세율 적용을 잘못된 39건에 대하여 취득세 61,169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에 대한 추징현황】

(단위 : 천 원)

과세구분	건수	추징사유	추 징 세 액		
			계	취 득 세	농특세 등
계	39		61,169	52,990	8,179
세율착오	23	건축물을 농지외 세율(4%)로 적용하지 않고 농지 세율(3%)로 적용 → 차액 1% 추징	17,990	14,285	3,705
	3	주차장 등을 주택외 세율(4%)로 적용하지 않고 주택세율(1%)로 적용 → 차액 3% 추징	20,463	17,927	2,536
	13	부부등 거래를 증여 세율(3.5%)로 적용하지 않고 주택세율(1%)로 적용 → 차액 2.5% 추징	22,716	20,778	1,938

나. 과점주주 취득세 미부과

- 「지방세법」 제7조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5. 12. 31. (유)○○상사의 대표이사 ○○○이 당초 소유한 주식은 20% 였으나, 2016. 12. 31. 아들 ●●●가 주식을 80% 취득하면서 ○○○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100%로 당초보다 80% 추가 취득하여 출자액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득으로 보아 761천 원의 취득세를 부과 하여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총 7건 48,266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과점주주 취득세 미부과분에 대한 추징현황】

(단위 : 천 원)

과세구분	건수	추징사유	추 징 세 액		
			계	취 득 세	농특세 등
과점주주	7명	과점주주 취득세	48,266	44,565	3,701

다. 지목변경 취득세 미부과

- 「지방세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3. 3. 21. (주)ΣΣΣ가 ㄱ ㄱ 읍 ○○리 550번지 2,142㎡를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하여 취득세 187천 원을 부과·누락하는 등 2013년~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 등 총 41건 24,665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지목변경 취득세 미부과분에 대한 추정현황】

(단위 : 천 원)

과세구분	건수	추정사유	추 정 세 액		
			계	취 득 세	농특세 등
지목변경	41	지목변경 취득세	24,655	22,666	1,989

※세부내역 별첨

라.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취득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7. 4. 5. ◇◇영농조합법인은 ㄱ ㄱ 군 ※※면 ☆☆리 115-1번지의외 2필지에 창고시설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취득세 10,688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2014. 2. ○○○이 ◇◇읍 ∞리 965-5에 주택을 증축하였으나 취득세 890천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취득세 11건, 16,810천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분에 대한 추정현황】

(단위 : 천 원)

과세구분	건수	추정사유	추 정 세 액		
			계	취 득 세	농특세 등
부동산 취득	11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16,810	15,199	1,611

※세부내역 별첨

마.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시설물 포함),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 등에게 부과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 ◎◎군 ●●과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5. 7. 30. ÅÅÅ이 사망하여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물건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을 찾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1,542천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총 77건 29,732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분에 대한 추정현황】

(단위 : 천 원)

과세구분	건수	추정사유	추 정 세 액		
			계	취 득 세	농특세 등
상속취득	77	상속에 대한 취득세	29,732	29,732	0

※세부내역 별첨

바. 농업보조금 등 취득세 과표 누락

- 「지방세법」 제10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은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신축분에 대한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는 농업보조금 600,000천원을 지원받아 ㄱ ㄱ 군 %%면 &&로 48-49번지에 상황버섯음료가공체험시설을 신축하면서 농업보조금 420,000천 원을 지원받고 용자부담 180,000천 원으로하여 총공사비 600,000천 원을 들여 완공 후 농업부서에서 정산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 시에는 신축비용을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 4,235천 원을 부과·누락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신축건물 과소 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등 총 17건, 26,650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취득세 미부과분에 대한 추징현황】

(단위 : 천 원)

번호	과세구분	건수	추징사유	추 징 세 액		
				계	취 득 세	농특세 등
				207,282	189,171	18,111
		소계	39건	61,169	52,990	8,179
1	세율착오	23	건축물을 농지외 세율(4%)로 적용하지 않고 농지 세율(3%)로 적용 → 차액세율 1% 추징	17,990	14,285	3,705
		3	공장용지 등을 주택외 세율(4%)로 적용하지 않고 주택세율(1%)로 적용 → 차액세율 3% 추징	20,463	17,927	2,536
		13	부부등 거래를 증여 세율(3.5%)로 적용하지 않고 주택세율(1%)로 적용 → 차액세율 2.5% 추징	22,716	20,778	1,938
2	과점주주	7	과점주주 취득세	48,266	44,565	3,701
3	지목변경	42	지목변경 취득세	24,655	22,666	1,989
4	부동산 취득	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16,810	15,199	1,611
5	상속취득	85	상속에 대한 취득세	29,732	29,732	0
6	농업보조금등	17	농업보조금 등 과표 취득세 과소신고분	26,650	24,019	2,631

※세부내역 별첨

조치할 사항

① ○○○군수는 취득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책임자 세무6급 ▼▼ 및 전 실무담당자 행정8급 §§§, 전 실무담당자 행정8급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군수는 부과 누락된 취득세 등 207,282천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연찬하여 취득세 세율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과점주주, 지목변경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시설 신축분,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취득세 미부과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확인하여 취득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 업무처리 소홀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1. 현황(업무개요)

가. ○○○군 ●●과에서는 2018. 5. 1. ~ 2020. 4. 30.까지 임기로 하여 「○○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군 공유재산 심의회 현황】

구분	공무원	법무사	건축사	○○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군 ㉡㉡ 부녀회장	한국㉡㉡㉡㉡ ○○군연합회
8명	3	1	1	1	1	1

나. ○○○군 ●●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토지 939건, 662,571㎡, 부동산 40건, 24,638㎡으로 총 979건, 687,209㎡를 등재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한 사항

가.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민간위원 위촉 대상으로 변호사등 해당분야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군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2018. 5. 1. ~2020. 4. 30.까지 임기로 하는 「○○군 공유재산 심의회」구성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현황”과 같이 법적 근거 없이 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여성농업인○○군연합회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확신과 지식의 전문성 확보에 소홀히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록 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고,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된 재산에 대하여 각 재산관리관별로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경상남도 및 ○○○군 소유로 취득 또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 1,323필지, 751,895천㎡와 건축물 8동, 1,917㎡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에 위 재산가액이 누락된 채로 지방의회 등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공유재산대장 누락 재산 현황】

(단위 : 건, 천㎡)

구 분	소유자	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1,331	753,812	
토 지	○○○군 및 경상남도	1,323	751,895	
건 물	○○○군	8	1,917	

* 세부내역 : 별첨

다. 공유재산 관리소홀 및 사용료 산정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함)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법 제 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산관리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공유재산인 ○○군 □□면 ◆◆리 290번지 등 아래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같이 2필지 238㎡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92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 ㎡, 천원)

재산소재지	면적	무단 점유면적	점유현황	미 부과 변상금
계	1,565	238		920
○○군 □□면 ◆◆리 290	1,395	60	주거용	24
○○군 ♥♥면 ●●리 207-4	170	170	주차장	896

조치할 사항

- ① 창녕군수는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책임자 행정6급 ◁◁ 및 실무담당자 행정7급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창녕군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법령에 맞게 구성·운영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된 공유재산을 등재하여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상금 920천 원은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 ·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국외연수 참가자 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의회(▣▣▣▣과)

조 치 기 관 창녕군의회

내 용

1. 업무개요

1. 현황(업무개요)

- ○○○군 ▣▣▣▣과에서는 2016년 아래 현황과 같이 ○○○군의회 의원 및 직원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하였다.

【○○○군의회 의원 및 직원 해외연수 현황】

(단위:천원)

기간	국가	연수대상	내용	예산
‘16.4.21. ~ 4.26(4박6일)	중국	17명 (의원 11, 직원 6)	▣▣▣ 자연보호구역, 공공기관 비교견학 등	28,490 (1인 1,675정도)

2. 관계법령(판단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에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창녕군 ■■■■과에서는 2016. 4. 21. ~ 4. 26.(4박6일)동안 ○○군의회 의원 및 직원 해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고, 의원 11명과 직원 6명 등 총 17명의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1,873천 원, 의원은 1인당 1,675천 원, 5급 공무원은 1,745천 원, 6급이하 공무원은 1,608천 원으로 지급하였다.
 - 창녕군 종합감사시 국외연수 대상자의 출국기록을 확인한 결과 창녕군의회 창녕군의원 의원 출국 기록이 없음에도 해당부서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여행을 마치고 난 후 출장여비를 정산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아 국외연수를 가지 않은 ○○○의원의 국외 출장여비 1,675천 원을 감사일 현재 까지 환수하지 않는 등 국외 출장여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2016. 5. “2016년 ○○군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에는 ○○○의원을 제외한 ○○군의회의원 등 16명(의원 10명, 공무원 6명)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결재를 득하였고,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내용에는 ○○○의원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하여 전체 17명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다.
- 따라서, 국외연수 참가자 숫자를 실제 참가자와 다르게 허위 공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창녕군수는 국외연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전 실무책임자 행정 6급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국외연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행정6급 ◆◆◆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징계, 훈계)
- ② 창녕군수는 군의원의 국외연수 출장여비 1,675천 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201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활용과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를 201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목재펠릿난방기)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다.

○ 사업현황

보 조 사업자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시공사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 △ △	창녕군 ○○○읍 ◇◇◇리 □□□-□□ □□	·KRP 350P보일러1식 ·저장사일로7ton 등	43,000	12,900	3,870	9,030	17,200	16.05.25. ~16.06.10.	○○에너지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보조금 교부 부적정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변경 등 부적정

「농지법」 제10조, 제23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농지, 상속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제32조의6, 제32조의 8,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제17조 그리고 위 보조금 결정통지 내용이나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7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거짓신청으로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규정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보조금 교부 부적정

창녕군 ★★★★★★에서는 위 보조사업자가 2016. 5. 25. 보조사업 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공사를 시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2016. 6. 1.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였고 2016. 6. 14.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하고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변경 등 부적정

창녕군 ★★★★★에서는 2016. 6. 1. 보조금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나 보조금의 교부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키며, 기타 관계법규 및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도록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가하고 사업내용과 설치장소, 사업비 등의 교부결정 내역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6. 10. 보조사업자로부터 당초 보조금 결정의 내용과 같이 “창녕군 ㉠읍 ◇◇리 □□□-□□”에 설치 완료하였다고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았고 2016. 6. 13. 내부결재로 동 사업 완료를 보고하고 2016. 6. 14.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016.12.30.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였다.

한편 보조사업자가 창녕군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한 사업대상지는 농지법 시행(1996. 1. 1.) 이후 매매농지(2014. 3. 31. 소유권 이전)로 상속이전 등을 제외하고는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데도 2015. 8. 1. 토지 소유자인 ▲▲▲과 보조사업자인 △△△가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번 경남도 감사기간(2015. 5. 8~2018. 5. 16)중 위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 대상지 현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조사업 대상지가 “창녕군 ☆☆면 ㉠리 □□□-□ 외 1필지”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완료보고서와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변경사항

구 분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임대인)	비 고
당 초	㉠읍 ◇◇리 □□□-□□ □□	답	1,964	△ △ △	
변 경	☆☆면 ㉠리 □□□-□ □	답	996.2	▲ ▲ ▲ (△ △ △)	-농지법 제23조 위반 임대차 계약
	☆☆면 ㉠리 □□□-□ □	답	2609.3		

자료 : 창녕군 자료 재구성

그러나 창녕군 ★★★★★에서는 위 보조사업자인 △△△가 감독관청인 창녕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여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하였고 그 사업완료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사실상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당하게 추진된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사업완료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 하였다.

그 결과 농지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임대차 농지에 「2016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사용된 보조금 25,800천원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과 다르게 사용되었다.

처분요구

- ① 창녕군 ★★★★★에 근무하면서 201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농촌지도사 ■■■(현 □□□□ □□□□□)과 실무책임자 농촌지도관 ○○○(현 □□□□과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훈계)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과 보조금 관련 법령교육 실시하고, 신청 대상 농지에 대하여 공부상 자료 확인 등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에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을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139,980천원의 사업비를 융자지원 하였다.

○ 사업추진현황

대상자(후계농)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대출실행액
성명	주소			
△ △ △	♠♠읍 ♥♥2길 00	시설하우스(3동 2,640㎡) 및 양액, 보온시설 신설	☆☆면 ◇◇리 1264, 1265	139,980천원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법」 제618조 등에 따라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은 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에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며,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농지, 상속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후계 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 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창녕군 ★★★★★에서는 상기 사업 대상자 △△△이 농지 소유자가 아닌 권한이 없는 소유자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면 ◇◇리 1264, 답, 1,683㎡)와 농지법에 따라 농지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창녕군 ☆☆☆면 ◇◇리 1265, 답, 2,007㎡)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후 창녕군에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시설하우스설치비용 139,980천원을 용자 실행가능하도록 △△△에게 2016.11.7.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

〔표〕 시설하우스 설치 임차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인)	소유권 변동일	계약기간	위반사항
☆☆면 ◇◇리 1264	답	1,683	△△△ (▲▲▲)	1974.4.2.	2016.1.10.~ 2027.1.10.	농지소유자가 아닌자와 계약체결 -농업경영정보 미일치
☆☆면 ◇◇리 1265	답	2,007	○○○	2011.12.8.	2016.1.10.~ 2027.1.10.	농지법 제23조 위반 임대차 계약 -농업경영정보 미일치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되어 있지만, 창녕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후계농 자금으로 설치한 △△△의 시설하우스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후계농 농업경영인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 지방농업서기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와 신청 대상 농지에 대하여 공부상 자료 확인 및 농업경영체등록 사후관리 등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등 관련자에게는 불법 임대차 농지(☆☆면 ◇◇리 1265)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낙동강유채축제 무궤도열차 지원사업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사)창녕낙동강유채축제위원회(위원장 ∇∇∇)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2013년과 2016년에 무궤도 전동열차 제작·구매 지원사업으로 220백만원을 교부하여 정산보고를 받았다.

[표1] 창녕낙동강유채축제 무궤도열차 제작·구매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교부액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예산과목	집행내역		
						계	집행액	잔액
계		220,000				220,000	206,637	13,363
유람열차 구입	2013.6.25. ~2014.4.30.	100,000	(사)창녕낙동강유채 축제위원회 위원장 △△△	유람열차 1식(40인승, 구동부 1대, 승객부 2대)	민간자본 보조	100,000	98,481	1,519
창녕낙동강유채 축제 무궤도열차 지원사업	2016. 2.20.~ 5.30.	120,000	(사)창녕낙동강유채 축제위원회 위원장 ∇∇∇	무궤도 열차 1식 (동력차 1대, 객차 2량-24인승/량당)	민간자본 보조	120,000	108,156	11,844

※ 자료 : 창녕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무궤도 열차 제작·구매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6(지방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 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및 제98조(양벌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을 부과(양벌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창녕군 ★★★★★과에서는 (사)창녕낙동강유채축제위원회(위원장 ▽▽▽, 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2016년 창녕낙동강유채축제 무궤도 열차 제작·구매 지원사업(사업비 : 120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축제위원회가 무궤도 전동 열차 구입계약을 창녕군에 대행 의뢰(’15.12.16.)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108,156천 원에 구매(주)○○○○○○○○, 대표 ◁◁◁)하였으며, 이후 보조사업 정산과정에서 열차 구매대금 잔액 11,844천 원이 본 계약건의 최초 개찰 결과(’16.1.14.) 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업체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 대표 ▷▷▷)의 통장으로 계좌이체(’16.7.13.)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열차 제작 불법하도급 여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등을 확인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 없이 축제위원회에 사유서(’13년 ♡♡♡♡과에서 군비 보조금으로 구입한 전동열차(3대)의 배터리 교체비용으로 지급)만 받고 보조금통장에 집행잔액을 현금으로 입금(’16.7.27.)됨에 따라 정산 완료하였다.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관리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⁶⁾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창녕군 ★★★★★과에서는 축제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군에서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받음)인 무궼도 열차를 ‘자전거대여 및 매점’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낙동강 남지 유채마을협동조합(대표자 ∇∇∇, 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에게 무단으로 대여 등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마을기업으로부터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허가요건인 유기기구(무궼도 전동열차)가 마을기업 소유가 아닌 축제위원회가 군비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임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마을기업에 일반유원시설업을 허가(처음<최초허가 : 2014.04.28.>에는 축제기간<4월말~5월 중순>만 허가하다가 2016년부터는 허가는 유지하되 축제기간 외는 휴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바뀜)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마을기업에서는 낙동강유채축제기간 중 전동열차(‘13년도에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한 4대)를 관광객들에게 유료로 대여하여 영업수익(아래 [표2] 참조)을 올린 후 그 수익금 일부를 다시 위원회로 입금하였음에도 중요재산의 대여 여부 확인 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6)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표2] 창녕낙동강유채축제 마을기업 수입·지출 내역(2015~2017)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계	354,729	계	219,527	135,202	'18년 수익금은 정산중
무궤도 열차	172,898	무궤도 열차	23,041		
자전거	46,797	자전거 정비	3,445		
자판기	17,751	자판기 음료	8,993		
이월금	32,439	사무국	58,904		
기타	84,844	행사기간 인력	36,938		
		보험(자전거, 열차)	8,859		
		축제위원회 이체	57,099		
		기타	22,248		

※ 자료 : 창녕군 제출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인 ★★★★★과(현 ☞☞☞☞과) 지방행정주사 ◆◆◆◆, 실무담당자인 ★★★★★과(현 ●●●면) 지방행정주사보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낙동강 남지 유채마을협동조합에 무단으로 대여된 무궤도 전동열차를 (사)창녕낙동강유채축제위원회로 회수한 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앞으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보조금계좌 관리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현수막게시대 수의계약 및 설계반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현수막 게시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로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제작·설치(3건 84,014천 원)하면서 (주)▲▲▲▲와 특허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현수막 게시대 수의계약 현황

부서명	계약일자	사업명	품명	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 방법	계약자	비고
계				11	84,014			
▲▲ ▲▲과	'14.05.29.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	간판대 또는 스탠드	4	29,960	수의	(주)▲▲▲▲	권익위 이첩민원에 따른 도 감사결과에 따라 담당자 (행정7급 ▽▽▽) 주의 처분 기조치('18.3.12.)
	'15.06.02.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제작 설치	"	3	23,062	"	"	
	'17.04.25.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 설치	"	4	30,992	"	"	

※ 자료 : 창녕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현수막 게시대 수의계약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창녕군 ▲▲▲▲과에서는 현수막 게시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로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접철식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제작·설치(3건 84,014천 원)하면서 특허를 근거로 재질·성능·가격·효과·실적 등이 유사하고 상호간 대체·대용품에 해당하는 3개사의 특허제품만을 비교한 후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창녕군 ■■■과를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함으로써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3. 특허제품 설계반영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창녕군 ▲▲▲▲과에서는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특허(특허등록번호: **-03487**) 내용 중 ①접합부위 및 접히는 모양, ②고정막대에 현수막 지지대 고정, ③풍압에 완충작업을 하는 스프링을 위 [표1] 현수막 게시대 수의계약 시 제작·설치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않고 발주하였으며 아래 [표2] 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검수하는 등 물품설치 감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주)☒☒테크 특허 게시대 설치 부적정 내용

- | |
|--|
| ① 특허 상 접합부위가 경첩으로 제작되어 병풍(W)처럼 접혀야 하나, 힌지로 제작되어 X자로 접히는 구조로 제작 설치
② 특허 상 고정막대 브래킷에 현수막 지지대를 끼워야 하나 고정봉으로 제작 설치
③ 특허 상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바람을 흡수해야 하나 스프링이 없이 제작 설치 |
|--|

처 분 요 구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인 ▲▲▲▲과(현 ○○○○과) 지방행정서기 ◆◆◆, ▲▲▲▲실(현 ▲▲▲▲과) 지방시설주사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낙동강유채축제 조성 비료·퇴비 구입 분할 발주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준비를 위하여 낙동강둔치 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및 퇴비 구입에 연 60~70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물품은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과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준비를 위하여 낙동강둔치 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퇴비 등을 구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도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로 유채축제 소재지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견적으로 시행품의를 받아 계약부서인 ○○○과에 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2017년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행정안전부 예규를 근거로 낙동강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와 퇴비를 분할하여 시행품의를 받아 계약부서인 ○○○과에 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과에서는 ◆◆◆◆과에서 부적정하게 분할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부당하다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5년도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2017년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창녕군 소재 업체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게 하였으며 비료와 퇴비를 동시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도내 업체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을 경우와 대비한 결과 34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낙동강유채단지 조성 비료·퇴비 구입 분할 발주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명	계약 일자	사업명	품명(규격)	수량 (포, 톤)	예정 가격	계약 금액	예산낭비액 (추정)	계약 방법	계약자
계				12,687	216,497	213,734	34,108		
◆◆◆◆과	2015-08-28	2015년 남지읍 낙동강둔치 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및 석회, 봉사 구입 살포	맞춤형비료(맞춤16호 20kg), 석회(20kg), 봉사(1kg)	3,600	24,152	24,152	10,404	1인 견적 수의	○○농협
◆◆◆◆과	2015-08-28	2015년 남지읍 낙동강둔치 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퇴비 구입 살포	부산물퇴비 (유기물함량30%이상)	224	41,888	41,888		1인 견적 수의	○○농협
◆◆◆◆과	2016-09-23	2016년 낙동강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및 석회, 봉사 구입	석회비료(백광소재 20kg), 맞춤형비료 (맞춤16호), 규산비료 (누보, 논에풍, 1kg)	4,055	25,258	25,258	11,661	수의 (g2b)	○○농협

부서명	계약 일자	사업명	품명(규격)	수량 (포, 톤)	예정 가격	계약 금액	예산낭비액 (추정)	계약 방법	계약자
◆◆ ◆◆과	2016- 09-23	2016년 낙동강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퇴비 구입 살포	가축분퇴비(1등급)	254	48,756	48,133	12,043	수익 (g2b)	●●농협
◆◆ ◆◆과	2017- 09-20	2017년 낙동강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 구입	임상붕사(1kg), 요소비료(20kg), 석회비료(20kg), 맞춤형비료(20kg)	4,300	27,040	25,535		수익 (g2b)	●●농협
◆◆ ◆◆과	2017- 09-20	2017년 낙동강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퇴비 구입 살포	부산물퇴비 (유기물함량30%이상)	254	49,403	48,768		수익 (g2b)	▣▣ 농자재

※ 예산 낭비액 : 물품 1억원 미만 낙찰 하한율 84.245% 적용

처 분 요 구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인 ◆◆◆◆과 지방녹지주사 ㄹㄹㄹ, ◆◆◆◆과 지방녹지서기 ㄱㄱㄱ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 매년 차선재도색 공사, 교통신호기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기별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과에서는 차선도색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선도색 예산이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일 종류의 공사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건의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금액 이하로 분할발주 하고,

교통신호기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신호기 예산이 단일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일 종류의 공사임에도 2015년~2017년까지 총 10건의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사업시행품의를 작성, ○○○과에 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창녕군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매년 동일 예산을 동일하게 분할 발주하여 계약 의뢰된 공사에 대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당하다면 이를 통합발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에서 계약 의뢰한 차선도색 30건을 각각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주)◆◆ 18건)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기 설치 등 공사 10건을 분할하여 이중 6건은 (주)◆◆◆◆에, 4건은 (주)◆◆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18,079천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행정주사 ◇◇◇, ◆◆과 지방행정주사 ○○○, 실무담당자 ○○○○○과 지방행정주사보 ■■■, ○○○○○과(현재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 ◆◆과(現 ◆◆읍) 지방세무주사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 노후관 교체공사 타당성 검토 소홀
 소 관 기 관 창녕군(▲▲▲▲▲▲)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에서는 2017년 ◆◆◆◆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 요청을 상하수도 사업소에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계약 체결된 (주)□□□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을 취소하였다.

【용역 및 공사 계약 현황】

구분	공 사 명	도 급 자	사업개요	도 급 액 (천원)	비고
용역	□□□□◆◆◆◆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주)▲▲▲▲	실시설계 용역 1식	10,470	예산 낭비
공사	□□□□◆◆◆◆ 노후관 교체공사	(주)□□□□	배수관로 L=629m	29,488	타절금액 0원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에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 후 ‘□□□□ ◆◆◆◆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공사 계약하고 사업 추진 중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불가능 공사 도급업체 (주)□□□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설계용역비 10,47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지방시설주사 ■■■, 실무담당자 ▲▲▲▲▲▲(現 ○○○○) 지방시설서기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요구

제 목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2012년 10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3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 6월 기본계획 인가고시, 2014년 시행계획 인가고시하여 같은 해 6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연차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신규공종에 대한 분리발주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V-4-다-1)에서는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감리(감독)원의 업무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1. 시공계획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VI-1-가. 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다음 4가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VI-5-가. 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 및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하천 점용허가 미실시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에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1항에 법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신규공종에 대한 분리발주 미실시

【공사 계약 현황】

공사명	도급자	사업개요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증액	
계			-	87,658	87,658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건설(주)	●●소류지 진입도로	-	57,971	57,971	신규 추가
		○○로 보도설치	-	29,687	29,687	신규 추가

창녕군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 및 기존 공종(●●스포츠파크 진입도로)이 다른 공사와 중복에 따라 사업비 감액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상기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신규(추가)로 공사비 87,658천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약하여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공사비 조정 내역】

구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고
		당 초	조 정	차 액	
계(제경비 포함)		16,017	8,625	△7,392	원단위 미만절사
2015년 분	보차도경계석 합판거푸집 미설치 (204㎡→ - ㎡)	11,074	5,980	△5,094	시공물량 미정산
2016년 분	보차도경계석 합판거푸집 미설치 (160㎡→ - ㎡)	4,943	2,645	△2,298	시공물량 미정산

※ 자료근거 : 창녕군 제출자료 재구성

창녕군 ◇◇◇◇과에서는 위 공사비 조정 내역과 같이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합판거푸집 없이 보차도경계석 기초를 시공하였으나 정산 처리 없이 준공처리하여 7,392천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지방하천 점용허가 미 실시

창녕군에서는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내에서 공원시설(운동기구, 파고라 등) 설치, 노면 포장, 식물의 식재 등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적합여부, 공작물 설치로 인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를 위해 하천관리청(경남도) 협의와 하천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정천(지방하천) 정비하면서 목교 등을 설치하면서 점용허가 없이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사감독관으로서 부당한 수의계약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현 ●●면사무소) 지방시설주사 ■■■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징계』 처분하시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시설주사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 ② 과다 지급된 금액(7,392천원)에 대해서는 창녕군 의견대로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창녕 〇〇5지 교통광장 조성사업」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는 창원시 소재 ○○○○(주)과 2017년4월7일 「창녕〇〇5지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도급 521백만 원에 계약하고 2017년4월11일 공사 착공하여 2018년4월5일 준공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신규공종에 대한 분리발주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V-4-다-1)에서는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리(감독)원의 업무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시공계획의 검토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지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VI-1-가.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다음 4가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VI-5-가.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 및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신규공종에 대한 분리발주 미실시

【공사 계약 현황】

공 사 명	도 급 자	사업개요	도 급 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증액	
계			483,278	521,378	38,100	
창녕 〇〇5지 교통광장 조성사업	〇〇〇〇	회전교차로 1식 ⇒ 1식 교통신호기설치 : - ⇒ 1식,	483,278	521,378	38,100	신규 추가

창녕군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창녕 〇〇5지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창녕경찰서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요구사항과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상기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신규(추가)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공사비 38,100천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약하여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공사비 조정 내역】

공 종	내 용	사업비(천원)			비고
		당 초	조 정	차 액	
계(제경비 포함)		54,656	44,170	△10,486	원단위 미만절사
토공사	꽃잔디 물량 조정 (630㎡→625㎡)	36,336	36,047	△289	시공물량 미정산
포장공사	합판거푸집 미설치 (393㎡→144㎡) 보도블럭 물량조정 (564㎡→528㎡)	18,320	8,844	△9,476	시공물량 미정산
부대공사	보도블럭(사급자재) 조정 (564㎡→528㎡)		-721	△721	시공물량 미정산

※ 자료근거 : 창녕군 제출자료 재구성

창녕군 ▲▲▲▲과에서는 위 공사비 조정 내역과 같이 「창녕 〇〇5지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꽃잔디, 합판거푸집, 보도블럭에 대한 정산처리 없이 준공처리하여 10,486천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시설주사 ■■■■, 실무담당자 지방시설주사보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과다 지급된 금액(10,486천원)에 대해서는 창녕군 의견대로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창녕읍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 추진한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2015.11.27. 사천시 소재 (주)■■■건설과 도금액 761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6년 9. 12. 준공한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V-4-다-1)에서는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리(감독)원의 업무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 시공계획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VI-1-가. 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다음 4가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VI-5-가. 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공사 계약 현황】

공 사 명	도 급 자	사업개요	도 급 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증액	
계			487,480	554,500	67,020	
창녕읍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주) ■■■■ 건 설	관부설 1식 ⇒ 1식, 농로포장 : - ⇒ 200m	487,480	554,500	67,020	신규 추가

창녕군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창녕읍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상기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신규(추가)로 농로포장 L=200m 설치하여 공사비 67,020천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약하여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시설주사 ◆◆◆, 실무담당자 ■■■■과 지방공업서기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창녕군(☆☆☆☆과)이 2016. 11. 3. ♀♀군 소재 ♡♡건설(주) 대표이사 ○○○과 607,851천 원에 계약하고, 2016. 11. 7. 착공하여 2017. 12. 26. 준공한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의하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등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의제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는 미리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와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창녕군 ☆☆☆☆과에서는 2017. 12. 2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나, 준공일(2017. 12. 26.)까지 교량 신축이음장치(모노셀 L=32m, 탄성폴

리머 L=13m)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준공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신축이음 장치 모노셀 L=32m는 준공이후 2018년 4월말 경에 시공하였고, 탄성폴리머 L=13m는 감사기간 중인 2018. 5. 12. 시공한 사실이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부서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준공인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하천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지방하천인 ☞☞천 하천점용 대상인 교량공사에 따른 준공인가 협의 없이 준공처리 한 사실이 있다.

나. 공사감독업무 소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교량설계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 년도에 도로교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한계상태설계법’으로 교량을 설계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교를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설계한 사실이 있고,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에 따르면 거더교 및 빔교의 교면방수는 ‘도막식’으로 설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적용하는 ‘침투식’으로 설계에 적용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교량 난간(L=34m)을 관급자재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관급계약 시 현장설치도로 계약하였음에도 난간 설치비를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비 2,450천 원 중복 계상한 사실이 있고,

교대 터파기 시 암노출 깊이가 변경되어 교대(A2) 높이를 조정(감 H=70cm) 하였음에도 강관비계 물량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480천 원을 과다 계상 하였으며,

또한 L형 측구 및 도로경계석 시공을 위해 거푸집 A=586㎡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만(A=339㎡) 시공하여 공사비 7,570천 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위 도합 공사비 10,500천 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와 실무책임자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를 요구한다.(훈계)
- ② 교량 난간 설치비 및 강관비계 등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도합 공사비 10,500천 원 상당액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에 따라 회수 조치하시고,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는 창녕군(☆☆☆☆과)이 2017. 12. 27. ♡♡시 소재 (주)♡♡토건 대표이사 ○○○과 756,965천 원에 계약하고, 2017. 12. 28. 착공하여 2019. 3. 22. 준공예정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하면 지상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등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면적이 5천㎡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4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에 기반시설(체육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행정절차 이행 전 공사발주

창녕군 ☆☆☆☆에서는 2017. 11.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공설운동장)을 설치하고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부서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체육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없이 2017. 12. 12. 대합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체육시설(A=18,811m²)을 결정할 부지는 1만m²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사업승인 전에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사발주 이후인 2018. 5. 8.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협의 신청을 하였고,

또한 기반시설인 체육시설이 5천m²이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행정 계획 협의 시 및 실시계획 인가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제 공사 착공을 못하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 및 간접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공설운동장의 체육시설부지와 지방도 0000호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진입도로(L=185m, B=8m)를 계획하면서 지방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등 지방도의 관리청인 경상남도과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다.

나. 설계검토 소홀

@@공설운동장에 관람석 설치를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인 스탠드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스탠드는 흙을 성토하여 계단형으로 설치되므로 하부구조물이 없어 방수공법은 에폭시 도장이 경제적이므로 도막식 방수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18,104천 원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고,

진입도로부 L형 옹벽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옹벽 높이가 2~2.5m로써 지면에서 노출되는 높이가 일률적이지 않아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문양거푸집 설치가 불필요함에도 문양거푸집을 옹벽 2m는 1.3m로 옹벽 2.5m는 1.8m 일률적으로 계상하였고, 가감속차로구간에는 옹벽 연장을 L=5.1m를 L=51m로 잘못 적용하여 공사비 32,150천 원 과다 계상하는 등 위 도합 공사비 50,254천 원 상당액을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해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발주하여야 함에도 관련 인·허가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담당주사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동장 위치선정의 조속한 결정 등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를 요구한다.(훈계)
- ② 관련법령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인·허가(협의)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 ③ 스탠드 방수공법 및 L형 옹벽수량 등 과다하게 설계된 도합 공사비 50,254천 원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독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창녕군(☆☆☆☆과)이 2017. 3. 8. ♣♣ 시 소재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과 215,297천 원에 계약하고, 2017. 3. 10. 착공하여 2017. 8. 14. 준공한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 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절 실비 산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동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행정절차 이행 소홀

창녕군 ☆☆☆☆과에서는 2017. 2. 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2017. 6. 26.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사업구간 일부가 지방하천인 ♣♣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제방승상 및 난간설치 등에 따른 하천관리청(경상남도)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하천점용허가 등에 따른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7. 9. 26.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하면서 재해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함에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고시한 사실이 있다.

나. 공사감독업무 소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2017. 2. 8. 시행하면서 당초 순성토 운반거리를 임의 토취장 $L=20\text{km}$ 로 산정하여 설계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창녕군 ◇◇면 ♣♣리의 ◆◆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1,131\text{m}^3$)를 운반하여 운반거리가 $L=18.5\text{km}$ 변경되어 공사비 1,230천 원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7. 6. 26.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잔디블록에 부설되는 모래는 잔디블록 신규단가에 모래 자재대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나 별도 사급자대대로 중복 계상하여 공사비 570천원 과다 설계하였으며,

「조경공사 적산기준」에 의하면 조경석의 실제 체적률은 돌의 형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연석(산석·강석)과 가공조경석 모두 약 70%의 평균적인 실체적률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적계산은 $\text{체적} = \text{높이} \times \text{폭} \times \text{길이} \times \text{실체적률}$ 로 하고 단위중량은 화강암 기준 2.65ton/m^3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경석 수량산출 시 실체적률 70%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조경석 자재대를 견적가로 적용하면서 부가세포함가격으로 적용하는 등 공사비 14,780천 원 과다 설계하여 위 도합 공사비 16,580천 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붕괴위험지역인 사면 보강을 위해 당초 L형 옹벽(L=106m, H=2~4m)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는 것을 설계자 의견수렴 없이 조경석 쌓기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하천점용허가 미이행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담당주사로서 행정절차 이행 및 급경사지 지정해제 시 안전에 대한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를 요구한다.(훈계)
- ② 본 사업으로 인해 하천구역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귀 군의 하천관리부서 및 하천관리청(경상남도)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당초 L형 옹벽에서 조경석 쌓기로 변경한 부분을 포함하여 공사완료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타당성에 대하여 조속히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라며,
- ③ 순성토 운반거리 및 조경석 수량산출 등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도합 공사비 16,580천 원 상당액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에 따라 회수 조치하시고,
-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권고 요구

제 목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설계검토 소홀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창녕군(☆☆☆☆과)이 2015. 6. 19. ♡♡시 소재 (주)♡♡ 대표이사 ○○○ 외 2개 업체와 623,200천 원에 계약하고, 2015. 6. 23.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17. 12. 20. 용역 준공하여 공사발주 준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7조(용역감독자의 지정)에 따라 발주청의 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29조(용역감독자의 임무)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과에서는 2017. 12. 2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품질관리비 등은 경비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사면안정검토 및 지질조사 보링 등 외주로 의뢰되는 조사비용을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3,427천 원 과다 계상하였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미끄럼방지시설 편에 따르면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목적은 선형 불량 구간, 교차로 진입부, 긴 내리막구간 등 노면 미끄럼 사고 또는 그 가능성이 많은 구간에 마찰력을 증진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데 있으며, 기본적인 설치장소로는 설계속도 60km/시 이상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설계기준 이하의 곡선반경 설치 장소, 내리막 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 최소 요구 마찰계수가 낮은 곳으로 하고, 도로관리청이 본 기준과 미끄럼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실적을 토대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만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 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로 신설구간에 미끄럼 방지포장(695m²)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23,913천 원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으며,

「방음벽 기초 표준도」(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79호, 2011. 1. 10.)에 따라 풍하중 1.5kN/m²이하로서 방음판의 높이가 6m미만인 경우 지주간격을 4m로 설계하여야 하나, 지주간격을 2m로 설계하여 공사비 7,080천 원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고,

토사 및 암 절취구간의 비탈면고르기는 보통인부와 기계조합보다는 시공의 효율성을 위해 기계시공으로 작업할 경우 경제적으로 보통인부를 제외하면 공사비 25,052천 원과 거푸집은 합판거푸집보다 유로폼이 경제적으로 유로폼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 28,087천 원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공사구간은 차량통행이 없는 도로 신설구간으로써 교통안전시설비인 로봇신호수, 임시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요원배치 등이 불필요함에도 안전시설비를 반영하여 공사비 71,130천 원 과다 설계하였으며,

발파암구간의 식생기반은 7cm로 도포하는 것이 경제적인에도 10cm 도포로
과다 계상하여 공사비 21,417천 원 과다 설계하였고,

순성토 운반을 위해 토취장을 임의거리 L=10km로 설계하여 토사 깎기품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173,396천 원 과다 계상하는 등 위 도합 공사비
353,502천 원 상당액을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다.

현재 창녕군에서는 본 사업구간 인근(L=2km)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구간에는 사토가 발생하는 현장
으로 본 사업의 토취장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구간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
682,780천 원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되므로 공사시기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조정하여 토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 촉구하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공사 및 용역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미끄럼방지포장 및 방음벽 시설 등 과다하게 설계된 도합 공사비 353,502천 원
상당액은 설계서를 수정 및 감액하여 사업 시행하시고,(시정)
- ② 순성토 운반거리 최소화를 위하여 토취장을 인근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으로 조정하여 공사비 682,780천 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사시기 및
방법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권고 요구

제 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검토 소홀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창녕군(☆☆☆☆과)이 2017. 3. 8. ♠♠ 시 소재 (주)♡♡ 대표이사 ○○○ 및 ♣♣시 소재 (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와 136,490천 원에 계약하고, 2017. 3. 10.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18. 2. 12. 용역 준공하여 공사발주 준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7조(용역감독자의 지정)에 따라 발주청의 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29조(용역감독자의 임무)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창녕군 ☆☆☆☆과에서는 2018. 2.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차재를 운반할 경우 적재 또는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순성토 운반에 따른 덤프트럭 적재시간이 10분을 초과하여 적재 시간의 유류대를 제외하지 아니하였고, 토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과다 계상하여 공사비 208,026천 원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고,

대규모 공사현장에서의 덤프트럭은 규격을 15톤보다 25톤으로 적용할 경우 경제적이며 본 공사에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면 공사비 30,587천 원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며,

제방축제는 하천 양안(2개소)이 아닌 우안(1개소)만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구간 연장이 L=370m로써 축중기와 세륜기는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개소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18,073천 원 과다 계상하는 등 위 도합 공사비 256,686천 원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다.

본 사업구간은 제방을 축제하기 위하여 대규모 성토가 필요한 현장임으로 인근에 토취장이 없는 등 순성토에 따른 공사비 절감을 위해 사면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제방 비탈면 경사를 1:3에서 1:2로 조정하고 제내지(저수지) 비탈면 사석부설 물량을 조정하여 공사비 186,410천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방축제 재검토가 필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 촉구하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공사 및 용역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순성토 운반 및 운반장비 규격 등 과다하게 설계된 도합 공사비 256,686천 원 상당액은 설계서를 수정 및 감액하여 사업 시행하시고,(시정)
- ③ 순성토 토량 최소화를 위하여 제방축제 비탈면 경사 및 사석부설 조정 등 공사비 186,410천 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면안정성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7. 6.20. \$\$군 소재 (주)%%종합건설(대표 &&&)과 도금액 613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9. 6.22.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 이상 3만㎡ 미만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이상 30만㎡ 미만은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의 3천㎡ 미만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미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에게, 나. 50만㎡ 이상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이상 100만㎡)의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이나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다. 산지면적이 5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미만)의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이나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행정절차 이행 소홀

그런데도 창녕군 #####과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본 공사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7,950㎡가 편입됨에 따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창녕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지역의 보전산지 외 산지 10,393㎡가 편입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창녕군수에게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을 위한 관련부서(기관)협의 시 농지 및 산지 전용에 대한 협의(의제)를 받지 않고 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함으로서 결국 농지·산지전용 허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미 이행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전용면적(㎡)		소 재 지	용도지역	허가권자	비고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장 L=1.82km	농지	7,950	창녕군 AA면 SS리 00-0번지 외 00필지	농업진흥지역 밖	창녕군수	
		산지	10,393	창녕군 QQ면 WW리 00-00번지 외 00필지	보전산지 외	창녕군수	

나. 설계내역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업무소홀

또한, 창녕군 #####과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감독 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순환 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2014. 3. 6.)」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임에도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의 40%이상을 순환골재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공사비 약 19,580천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2016.12.30.)」의 미끄럼방지포장 편에 따르면 신설도로의 경우 구조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단구배 2% 이내의 환경사구간의 신설도로에 미끄럼 방지포장이 계획되어져 있음에도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아 공사비 약 51,870천원 상당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등 위 도합 약 71,450천원 상당의 예산 절감요인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농지·산지전용 허가업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누락하고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과 전 실무담당자 지방CC d급 mmm와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현 실무책임자 지방DD F급 GGG에게 앞으로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미 반영되고 도로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반영된 미끄럼방지포장 등으로 과다하게 반영되어져 있는 공사비 약 71,450천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③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노선지정(변경) 시 협의(의제) 받지 못한 농지·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과에서 추진한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2015.11.27. @@소재 (주)\$\$건설(대표 %%%)과 도금액 761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6. 9. 12. 준공한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창녕군 #####과는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용수관로 매설에 따른 누수 등 시공상태 검증을 위하여 200m마다 1회씩 실시토록 계획된 수압시험을 2016. 3.26.~5.31.까지 시공사에서 실시하였으나 공사감독이 입회하지 않았으며, 1공구에 계획된 18회는 14회만 실시하고 2공구는 9회중 5회만 실시하여 보고하였으며, 1공구 14회 중 3회는 사진촬영 각도만 다르게 촬영하여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수압시험을 부적절하고 부족하게 실시하였음에도 수압시험에 대한 현장 확인을 누락하여 관로매설의 견실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준공처리 하였다.

[표 1] 수압시험 실시 현황

총 계획			1 공구					2 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획	실시			미 실시	계획	실시			미 실시
				계	정상	부적절			계	정상	부적절	
27회	18회	9회	18회	14회	11회	3회	4회	9회	5회	5회	-	4회

또한, 수압시험을 설계내역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설계에 반영된 수압시험비를 정산 없이 지출하여 공사비 약 17,730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용수관로 매설도로의 원상복구를 위한 콘크리트포장재의 품질시험 및 확인시험을 설계내역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약 2,720천원 상당이 정산 없이 지출되는 등 위 도합 약 20,450천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수압시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과 실무담당자 ★★ K급 nnn와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yy u급 ooo 에게 그 책임을 물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시공현장 품질·확인시험을 계획보다 부족하게 실시하고 수압시험을 부족하고 부적절하게 실시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라 “부실벌점”부과 및 “고발”조치 등 관련 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③ 아울러, 설계보다 부족하게 실시한 수압시험 및 품질·확인시험에 대한 정산 없이 준공처리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공사비 약 20,450천원 상당은 시공사로부터 조속히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④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QQ배수지 증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WWW사업소)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 WWW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QQ배수지 증설공사」는 2018. 3.28. @@ 소재 (주)\$\$종합건설(대표 ***)과 도금액 1,884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20. 4. 3.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일반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는 일반수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다.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마.**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일반수도 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일반수도 사업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에는 발주청 또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내진설계 내용과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주청에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행정절차 이행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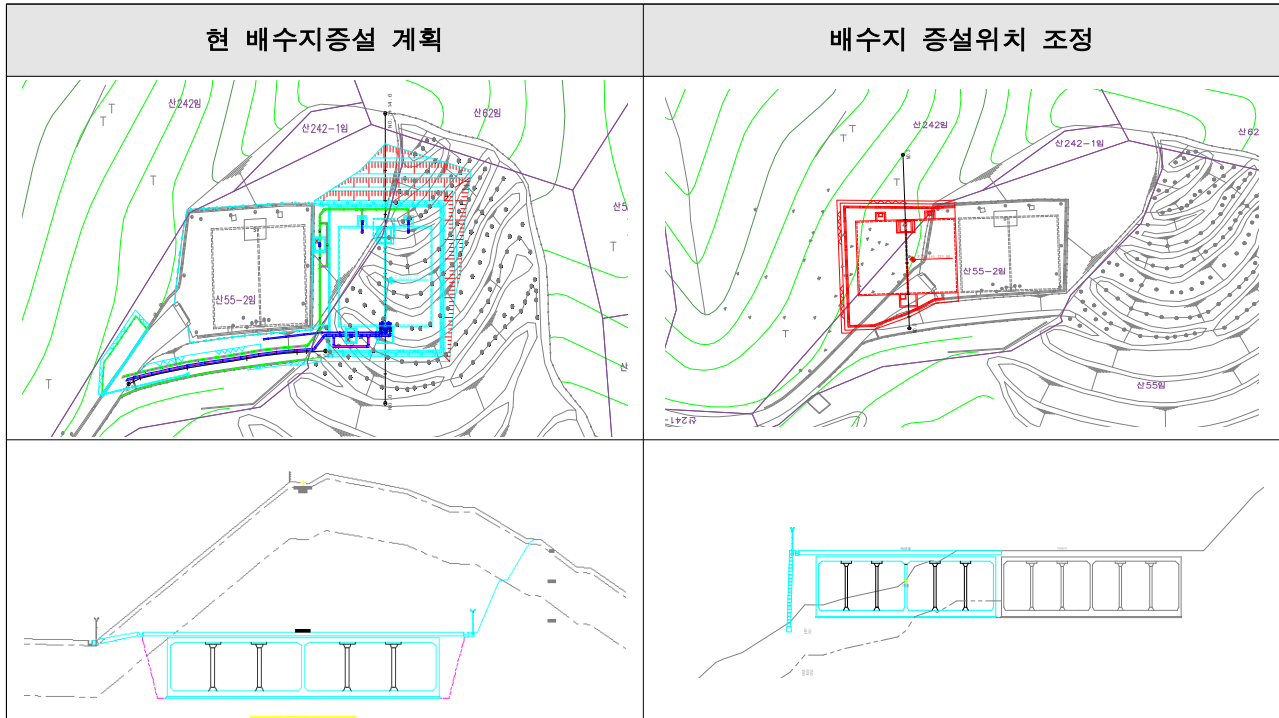
그런데도 창녕군 WWW사업소는 「QQ배수지 증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배수지 증설 등 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3. 창녕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QQ배수지 증설계획에 대하여 경제성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13. 창녕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담당부서의 임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배수지 증설(1,500톤×2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도(道)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배수지 확장계획 검토소홀 등 용역감독 업무소홀

또한, 창녕군 WWW사업소는 「QQ배수지 증설공사」를 계획하면서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함에도 배수지 증설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배수지 전면부로 확장이 가능함에도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애로(다수의 공동명의)를 사유로 기존배수지 뒤쪽의 임야절취를 계획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함에 따라 보상비 약 114,300천원 상당의 예산 낭비요인과 공사비 약 891,710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증설되는 배수지는 박스형식의 구조물로서 거푸집(유로폼) 규격은 보통구조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복잡구조로 반영하여 공사비 약 37,420천원 상당이 과다 반영되는 등 위 도합 약 929,130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도록 계획하는 등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감독(검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림] 배수지 증설위치 조정내역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수도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등의 인가 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비경제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 등 용역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WWW사업소 실무담당자 ss p급 DDD와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ss w급 EEE에게 그 책임을 물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계획한 증설용량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련법에 따른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승인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본 사업을 일시중지하여 승인내용을 반영한 관련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 공사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아울러, 배수지 증설위치 선정 부적절 및 거푸집 규격 적용오류 등 설계내역과 현장 부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하게 반영되어져 있는 공사비 약 929,130천 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④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건축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위법건축물 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창녕군 @@@@과에서는 「건축법」 제79조, 제100조에 따라 건축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5. 5. 1. ~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미부과 23건 및 고발 조치 미이행 10건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또한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는 허가권자는 같은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건축법」 제100조(벌칙), 제111조(벌칙)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 허가·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위반은 1억원 이하, 신고 위반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 창녕군에서는 창녕군 ##면 ##리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법 신축 등 위법 건축물 23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미조치 및 시정명령 후 철거 등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210,049천 원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건축물 고발 미조치

- 창녕군에서는 창녕군 ##읍 ##리 소재 숙박시설 불법 증축 등 위법건축물 10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철거 되지 않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위법건축물 조치’와 관련하여 위의 ‘가,나’와 같이 이행강제금 미부과, 미고발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시설6급 ○○○, 시설7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위의 ‘가,나’와 같이 ‘위법건축물 조치’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행정5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창녕군에서는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 %%%%%%%%% 신축 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창녕군은 (주)##종합건설 등 4개사와 2015. 6. 23. 3,811백만원에 계약하고 2015. 6. 24. 착공하여 %% %%%%%%%%%(부지면적 3,855㎡, 연면적 3,585.02㎡)을 2017. 1. 13. 준공 하였음.

2. 관계법령(판단기준)

-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은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에는 발주자의 요청으로 친환경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관련 설계 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정은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내용	비 고
산정식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설계용역비 과다 산정

- 창녕군에서는 ‘%% %%%%% 신축 공사’ 추진 과정에서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용역비 산정 시 추가설계대가 요율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표1] 과다 용역비 현황

구분	사업비(천원)			비고
	당 초	시 정	증 감	
실시설계 용역비	147,551	145,383	△2,128	

그런데 위 [표1]과 같이 의무사항이 아닌 지능형건축물인증에 대한 요율을 가산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였고,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산정하였음에도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지 않는 등 용역비 2,128천원을 부적정 하게 과다 산정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공사관리 부적정

- 창녕군에서는 ‘%% %%%%% 신축 공사’ 추진 과정에서 상기 법규에 따라 설계내역의 적합 여부 및 시공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① 출입문 유리 시공 부적정

- 1층 주출입구 방풍실 내측 출입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서에 로이복층유리로 되어 있으나,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강화복층유리로 시공 되었으며, 2층 체력단련실 출입구는 방화유리로 되어 있으나 강화유리로 시공

② 파일정산 부적정

- PHC파일 시공 시 향타 이후 지표면에서 남은 높이 만큼 미시공 된 잔량에 대하여 노무비 및 경비 등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미정산

③ 우레탄도막방수 반영 부적정

- 도면, 내역서에 노출 복합시트방수(우레탄도막 포함)로 되어 있음에도 단가 (견적서) 과소반영 사유로 우레탄도막 방수를 설계변경으로 중복 반영

위와 같이 우레탄도막방수 과다 반영, 출입문 로이·방화유리 미시공, 파일공사 미정산 등 공사비 15,976천원에 대하여 실제 시공과 같이 설계변경 하여 정산 및 재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 %%%%%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의 ‘가,나’와 같이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시설6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창녕군에서는 기초 파일공사 미정산, 방수공사 과다 계상 등 미시공·과다 계상된 공사비 14,601천원 상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정면 출입문 유리는 재시공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창녕군 @@@@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종으로 등록된 29건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자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등을 이행하는지 점검하여 관련규정에 부적합할 시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하여야 함에도,
##면 ##리 소재 *****은 2016. 8. 16. 까지 정밀점검 대상이나 현재까지 점검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창녕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시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9조(실태점검)는 시장·군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별표1의2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은
년 2회, 정밀점검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등급	정밀점검		비 고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 최초점검 - 건축물 : 준공 후 4년 이내 - 그 외 시설물 : 준공 후 3년 이내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3항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정밀점검 미이행 시설물 조치 소홀

- 창녕군은 ##면 ##리 소재 *****이 2012. 8. 17.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하여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누락 하였
으며,

2016. 8. 16. 정밀점검 기한까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무자격자 점검 사항 시정조치 소홀

- 또한 창녕군 관리시설물 ***** 등 4건은 정기점검을 수행하면서 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점검
토록 하여야 함에도 교육 이수 경력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술자가
점검하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위와 같이 창녕군 @@@@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위의 ‘가,나’와 같이 실무책임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정5급 ○○○, 행정6급 ○○○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창녕군에서는 *****시 정밀점검을 이행토록 조치하고, ***** 등 4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점검자가 점검토록 조치하시기 바람.
-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및 &&소하천 정비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6. 3. 4. \$\$ 소재 (주)EE종합건설 대표 WWW과 1,773백만원에 계약체결하고 2018. 8. 25. 준공예정인 사업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5. 11. 27. TT 소재 **건설(주) 대표 PPP와 1,124백만원에 계약체결하고 2019. 5. 19. 준공예정인 사업임.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5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 작성하거나 인가(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3조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 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행정절차 미이행(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창녕군(#####)에서는 군계획시설사업(소하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인가를 받아 실시계획 내용을 고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완료시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득한 후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나, 상기 @@소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계획 인가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누락하였으며,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는 사업 발주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 없이 행정절차를 누락하는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공사감독 업무 소홀(축중기 미반영, 안전위원회 심의 미실시 등)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토사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축중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토량이 25,660m³으로 현장 내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미반영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건설기준 땅깁기(절토)-KCS 11 20 10 : 2016」의 1.1.2(지층경계선 확정)에 따르면 땅깁기, 암깁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시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안전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녕군(#####)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암반에 대하여 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량을 확정하여 설계변경 함이 타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 검토만으로 물량을 정하여 설계변경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반영된 공사용가도(가물막이)에 대하여 실제 흙판 및 톤마대를 시공하였음에도 설계에는 흙판 및 PP마대로 계상되어 있으며, 교량설치 시 반영된 가시설(쉬트파일)이 실제 시공 보다 과다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미시공된 공사용가도에 대해서도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교량설치 시 반영된 강관비계와 동바리가 미시공 되는 등 위 도합 약 46,900천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수리검토 없이 호안정비공(견치블럭)을 반영하였고, 자재 운반거리에 대하여 미정산 되어 있으며, 동바리 미설치 구간에 대해 설계반영 됨에 따라 공사비 165,700천원이 과다계상 되는 등 도합 212,600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실무담당자 지방WW @급 RRR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미실시, 축중기 미운영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설계에 반영된 가시설(쉬트파일)을 실제 시공시 적게 시공 하고, 미설치 된 호안정비공(견치블럭) 등으로 부적절하게 설계반영 된 공사비 212,600천원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미 이행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조속히 협의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④ 관계 법령 검토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QQ사업소)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QQ사업소)에서는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는 소하천등에서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 관리청(창녕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개·보수 판단기준 표준매뉴얼」 3.2.1.(인입지역 촬영 및 맨홀내부 촬영)에 인입지역 촬영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하여야 하며, 인입지역 촬영부터 맨홀내부, 하수관거 촬영까지 끊김이 없는 촬영이 필요하며, 맨홀 촬영시 사다리, 인버트 관접합상태 또한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1(인입지역 촬영 기준)에 인입지역 촬영은 대상 하수관거 주변을 촬영하여, 하수관거 CCTV 촬영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기준이며, 인입지역 촬영 항목에는 주변전경, 조사명판, 맨홀뚜껑 등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변전경은 CCTV 조사 대상 하수관거 주변의 건물, 도로표지등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1.2(인입지역 촬영 방법)에 인입지역 촬영은 대상 하수관거를 촬영 후에 대상 하수관거와 일치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인입지역 촬영 단계부터 하수관거 내부촬영까지 연속적으로 촬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3.2.5(측시촬영)에 이음부의 촬영은 이음선을 따라 명확한 화면을 촬영하도록 한다. 이상항목의 촬영은 측시촬영 대상과 수직을 이루어 촬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1항에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소하천점용허가 미실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구역 내 공작물(관로) 설치에 필요할 경우에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청(창녕군)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녕군(QQ사업소)에서는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하천을 횡단하는 관로 매설시 해당부서와 점용협의를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하여 소하천 이용·관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하수도 품질시험 용역 추진 부적정

하수도 설치 공사 추진 시 관련 메뉴얼에 따라 CCTV 촬영 시 인입지역 촬영부터 하수관거 촬영까지 끊김 없는 촬영을 하여야 하고, 인입지역을 대표할 만한 곳을 선정하여 촬영하여야 함에도, 촬영결과물(CD)의 대부분이 인입지역 촬영하지 않고 하수관거 부터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인입지역에서 하수관까지 끊김 없이 연속촬영하여야 하나, 일부 인입지역을 찍은 영상에서 인입지역 촬영 후 영상을 끊고 하수관을 촬영하는 등 CCTV 결과물에 대하여 해당 공사, 해당 위치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며,

연결부 등에서 측시촬영(촬영을 멈추고 360° 회전 촬영)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촬영결과에 대한 관로 품질 이상 유무에 대해 판단이 어려움에도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준공하였음.

다. 공사감독 업무 소홀

창녕군(QQ사업소)에서는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된 엄지말뚝(H-PILE), 강널말뚝(SHEET-PILE)에 대하여 지하수위 영향이 없어 실제 설치하지 않았으며, 설계에 반영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안전보호책에 대한 품이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가설사무소가 설계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함으로 인해 공사비 316,585천원이 과다계상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설계반영된 교통안전웬스 및 웅카에 대해 실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 인해 공사비 5,980천원이 과다지출되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실무담당자로서 하수관로 품질시험 용역수행 부실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지방HH P급 ***, 실무책임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의 점검 및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다하지 못한 지방&& T급 mmm과 지방&& R급 BBB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사기 바라며, (훈계)
- ② 엄지말뚝, 강널말뚝 미시공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공사비 316,585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하사기 바라며, 교통안전웬스 미설치 등으로 정산 없이 부적절하게 지출된 공사비 5,980천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사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아울러, 소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하수관로를 설치한데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하여 조치하사기 바라며,
- ④ 인입지역 및 측시촬영 미시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CCTV 재촬영 등을 통해 용역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상 유무를 검토하시고, 결함 등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사기 바랍니다. (시정)
- 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사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창녕군(@@@@과)

조 치 기 관 창녕군

내 용

1. 업무개요

창녕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5. 11. 11. %% 소재 &&종합건설(주) 대표 ***과 3,264백만원에 계약체결하고 2018. 6. 30.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2017. 10. 19. (주)GG건설 대표 OOO와 226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0. 준공한 사업임.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항에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항에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 작성하거나 인가(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공원조성계획 및 군계획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사업 추진 부적정

창녕군(@@@@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도시공원을 설치·관리시에는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야 하며, 아래 표1과 같이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시설 변경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검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청취(경미한 사항의 경우 생략 가능) 등을 통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인가를 받아 실시계획 내용을 고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완료시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득한 후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2017년 12월에 준공한 ##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공원(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절차와 관련 부서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공원시설 자료요구(도면 등)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원조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표 1 > 공원조성계획 변경 내역

구 분		면 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휴양시설	66	115	49	
	운동시설	69	114	45	
	편익시설	-	8	8	
	유희시설	190	394	204	
	도 로	22	176	154	
	광 장	681	-	△681	
	녹 지	472	693	221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조경시설	9,500	7,940	△1,560	
	편익시설	10,880	10,920	40	
	유희시설	530	266	△264	
	관리시설	370	130	△240	
	도로,광장	20,386	20,247	△139	
	녹 지	1,550,866	1,553,029	2,163	

※ 창녕군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였으며, ##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의 당초는 추정치임.

또한, 현재 시행중인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공사감독 업무 소홀

창녕군(@@@@과)에서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재단가 적용 오류로 야자매트 단가가 과다계상 되어 있으며, 공원내 차선도색을 수용성으로 적용시 경제석 시공이 가능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도합 2,062천원 상당의 공사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 ① 실무담당자 지방## &급 YYY에게 공원조성계획 관리 부실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한데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변경)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③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설계 반영된 자재단가 적용 오류 등으로 인해 과다 계상된 공사비 2,062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④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하오니, 업무 연찬, 교육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